

<인권운동비평 9차; 징병제>

<한겨레21>

입력일 : 2001/03/07 22:41:36

제 목 : [박노자의북유럽탐험] 양심의 권리가 더 신성하다

징집대상자 중 10%가 '대체봉사' 택하는 노르웨이, 그것조차 거부하는 '완전거부자' 들도
 서구적 근대성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보급' 이나 '보편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통설이 된 지 오래다. 문자 보급과 고등 교육의 보편화, 유럽 특유 전염병들의 전세계적 보급과 설탕·담배의 유럽에서의 보편화, 참정권의 전례없는 확산과 정치운동들의 보편화... 그러나 국가 권력의 고도화와 강화, 그리고 '국민국가' 이념의 보급으로 인해서 보편화된 또 한 가지 현상은, 바로 국가의 합법화된 조직적 폭력, 즉 군복무였다.

'유럽적 민주주의' 와 '병역거부권' 은 동의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 소수의 귀족 장교와 천민취급을 받는 평민 졸병의 몫이었던 군복무는, 19세기에 와서 일체 '국민' 의 '신성한 의무' 로 탈바꿈하였다. 국민개병제도의 확산에, 1816년부터 군복무를 의무화시킨 노르웨이가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별다른 전쟁을 하지 않았던 스웨덴과 합방돼 있었던 노르웨이는, 징병제를 상당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실시할 여유를 가졌다. 자연 여건이 어려운 북부지역의 주민 전원이 면제되고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면제나 갖가지 특혜를 받은데다, 실제 복무에는 예비병으로 선발되는 소수의 일원만이 들어갔다. 이와 같은 '부드러운' 제제는, 유럽에서 군국주의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20세기 초까지 존재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식 국민개병제도의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성한 군복무의 의무' 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많았다.

살생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신성하고, 팽창해 가는 국가가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유린한다고 믿었던 퀘이커(Quaker)와 같은 종교 소수자들은, 군복무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살생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그들은, 그리운 고향을 버려 미주로의 이민을 택하는 서러움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내면을 철저히 지켰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자본가들의 이득만을 챙겨주는 국가를 위해 다른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의 피를 흘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반(反)군복무 운동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결국 예수와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노르웨이 땅에서 유럽적 근대성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인 '국가적 폭력의 보편화' 가 어느 정도 견제되어, 민주적·인권적 근대의 모습이 지켜졌던 것이다.

노동당과 공산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1922년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허용해주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최초의 법안이 노르웨이 국회에서 채택됐다. 이 법안 채택의 배경에는, 국내 반(反)군복무 운동의 성과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분발한 평화주의자들의 열띤 투쟁의 결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지에서 통과된, 대체봉사 관련 법률의 영향도 있었다. 사실 대체봉사제도를 가장 늦게 법적으로 인정한 프랑스(1963), 벨기에(1964), 스위스(1996)만 제외하고는, 이미 1920~30년대에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은, 유럽 대부분의 민주법치국가에서 보편화됐다. 사실 그때부터 병역거부권의 존재 여부는 민주 법치 수준의 주요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권에 문제가 많았던 동독마저도 1964년부터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민주국가' 로서의 공인(公認)을 받아야 했던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문맥에서, 병역거부운동의 선봉에 섰던 유럽 노동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초기의

<인권운동비평 9차; 징병제>

<한겨레21>

입력일 : 2001/03/07 22:41:36

제 목 : [박노자의 북유럽탐험] 양심의 권리가 더 신성하다

징집대상자 중 10%가 '대체봉사' 택하는 노르웨이, 그것조차 거부하는 '완전거부자' 들도 서구적 근대성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보급' 이나 '보편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통설이 된 지 오래다. 문자 보급과 고등 교육의 보편화, 유럽 특유 전염병들의 전세계적 보급과 설탕·담배의 유럽에서의 보편화, 참정권의 전례없는 확산과 정치운동들의 보편화... 그러나 국가 권력의 고도화와 강화, 그리고 '국민국가' 이념의 보급으로 인해서 보편화된 또 한 가지 현상은, 바로 국가의 합법화된 조직적 폭력, 즉 군복무였다.

'유럽적 민주주의' 와 '병역거부권' 은 동의어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 소수의 귀족 장교와 천민취급을 받는 평민 졸병의 몫이었던 군복무는, 19세기에 와서 일체 '국민' 의 '신성한 의무' 로 탈바꿈하였다. 국민개병제도의 확산에, 1816년부터 군복무를 의무화시킨 노르웨이가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별다른 전쟁을 하지 않았던 스웨덴과 합방돼 있었던 노르웨이는, 징병제를 상당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실시할 여유를 가졌다. 자연 여건이 어려운 북부지역의 주민 전원이 면제되고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면제나 갖가지 특혜를 받은데다, 실제 복무에는 제비뽑기로 선발되는 소수의 인원만이 들어갔다. 이와 같은 '부드러운' 체제는, 유럽에서 군국주의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20세기 초까지 존재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식 국민개병제도의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성한 군복무의 의무' 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많았다.

살생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신성하고, 팽창해 가는 국가가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유린한다고 믿었던 퀘이커(Quaker)와 같은 종교 소수자들은, 군복무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살생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그들은, 그리운 고향을 버려 미주로의 이민을 택하는 서러움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내면을 철저히 지켰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자본가들의 이득만을 챙겨주는 국가를 위해 다른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의 피를 흘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반(反)군복무 운동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결국 예수와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노르웨이 땅에서 유럽적 근대성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인 '국가적 폭력의 보편화' 가 어느 정도 견제되어, 민주적·인권적 근대의 모습이 지켜졌던 것이다.

노동당과 공산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1922년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허용해주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최초의 법안이 노르웨이 국회에서 채택됐다. 이 법안 채택의 배경에는, 국내 반(反)군복무 운동의 성과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분발한 평화주의자들의 열띤 투쟁의 결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지에서 통과된, 대체봉사 관련 법률의 영향도 있었다. 사실 대체봉사제도를 가장 늦게 법적으로 인정한 프랑스(1963), 벨기에(1964), 스위스(1996)만 제외하고는, 이미 1920~30년대에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은, 유럽 대부분의 민주법치국가에서 보편화됐다. 사실 그때부터 병역거부권의 존재 여부는 민주 법치 수준의 주요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권에 문제가 많았던 동독마저도 1964년부터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민주국가' 로서의 공인(公認)을 받아야 했던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문맥에서, 병역거부운동의 선봉에 섰던 유럽 노동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초기의

소련도, 상당히 오랫동안(1939년까지) 적어도 법률상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권을 인정했다. 한마디로 1920~30년대부터 노르웨이를 포함한 대다수의 유럽 민주국가에서 '유럽적 민주주의'와 '병역거부권 인정'은 동의어로 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쟁중에도 병역거부권 쟁취투쟁

현재로서, 통계상 1년에 징집되는 젊은이들의 약 10%는 16개월(정상적 병역기간의 거의 2배)의 대체복무를 택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 봐서 대학생 중 거부 의사자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

복무의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중·고등학교에 학생간의 싸움을 방지하는 상담 요원으로 파견되어 자신의 반(反)폭력적 신념을 실천적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좌익계 거부자들이 아동구조·대의원조 기구에 취직하여 세계적 불평등 구조를 조금이나마 고치려는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와의 이와 같은 타협까지도 뿌리치고 '완전거부'의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1년에 100~200명이나 된다. 자신의 신념과 어울리는 복무까지도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말을 한국에서 하면 '배부른 사람들의 장난'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완전거부자'(total objector)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보면 일리가 상당히 있어보인다. 그들은 병역의 근거인 국가의 '국민 동원권' 자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기간의 군복무나 대체봉사를 강요한다는 것은, 고대 유럽에서 노예주가 노예를 부리거나 중세 동양사회에서 전제군주가 백성을 토목 공사에 징집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반(反)민주적이고 반(反)인륜적인 폭력이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폭력과 타협해서 편안한 대체봉사의 길로 간다는 것은, 폭력의 공범(共犯)이 되는 수치와 다를 것이 없다. "힘에 굴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란 말은 그들의 표어다. 그러면 국가의 힘에 굴종하지 않는 대가는 보통 무엇인가?

1993년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완전거부자'는 90일의 구류를 당할 수 있다(특별한 경우에는, 180일간의 구류도 가능하다). 그리고 물론, 전과자가 된 그들은 나중에 공무원으로서 출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국가와의 정면 충돌을 선택한 그들의 감옥 체험담과 법률 조언들을, '완전거부자' 협회의 공식 웹사이트(<http://pluto.wit.no/doogie/ga/huset/kmv/>)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신념을 같은 평화주의자 사이에서도 일종의 극단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운동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노르웨이 진보운동 전체에 대단히 다행이라고 노르웨이인들은 생각한다. 타협과 안주를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최근에 대체복무제도의 장기적인 정상 운영으로 만족과 침체에 빠진, 노르웨이의 반전(反戰) 반(反)폭력 운동의 생명과 활력이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최초의 대체복무법(1916년)을 쟁취한 영국의 평화주의자들은, 냉전도 아닌 열전(제1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 군복무를 거부하여 영창에 끌려가곤 하였다. 지금도 그리스와의 대치 속에서 쿠르드족과의 사실상의 교전 상황에 있는 터키에서는, 일부의 사회주의자·무정부주의자들이 군복무를 거부해 재판과 징역을 받고 있다. 결국 아직까지도 대체복사법이 없는 터키에서 이 법이 채택된다면, 지금과 같은 '전쟁 속의 병역거부운동'의 결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사적 파시즘이 이미 일상화된 군국주의 국가 이스라엘에서도, 아랍권과의 끝나지 않는 대치 속에서도 극소수 양심분자의 병역 거부 투쟁은 끈질기게 지속된다. 그 결과로, 대체복사제도가 이미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국가간의 대치 상황이나 전쟁은 대체근무제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제도의 쟁취를 위한 투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한국에는 왜 아직도 없는가

그러면 한국에는 아직 대체복사제도가 없는데,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진보진영에서조차 희미한 근본적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보통 이와 같은 질문을 한국 지식인에게 하면 '전통적인 국가주의'를 탓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전통 시대의 말기에 조선 천주교 신도들이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여, 양심의 자유를 위한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던가? 개인의 양심과 신념보다 '국가적 필요성'이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군사적 광기가 짙었던 일제 말기의 '국민 총동원' 시기다. 태평양전쟁 시기의 군국주의적·국수주의적 세력의 장치들을 남·북한의 정권이 각각 그대로 이어받아 "국가를 위한 살생도 종교적·도덕적 죄"라는 단순한 논리조차 생기지도 못하게 국가와 군대를 이전의 일본 천황과 같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만들어놓았다. 지금 한국의 반(反)군복무 운동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남북의 분단과 대치 자체라기보다는, 남·북한 정권의 많은 공통점 중의 하나인 일제식 세뇌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르웨이 반(反)군복무 운동의 '쌍두마차'를 이룬 것은, 예수의 살생 금지를 실천하려는 일부의 기독교인과, 계급 국가를 불복종하려는 일부의 좌파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극우반공체제 상황에서 좌파 운동이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받았고, 대부분의 주류 종교 집단들은 일제시대의 전례대로 국가와의 전면적인 타협을 하거나, 혹 독재국가와의 충돌을 한다 해도 '신성불가침'한 안보·병역의 영역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각종의 터부들이 점차 무너져가고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세뇌의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양심과 엇갈리는 국가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많아질 것이다.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 교수·한국학

입력일 : 2000/03/22 15:52:04

제 목 : [표지이야기] 징병제를 흔들어라

1999년 12월23일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군필자 가산점 부여 위헌 결정' 이후, 대한민국 남성들은 여성들을 겨냥해 놀랄 만한 단결력을 발휘했다.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는 "60만 명의 군인 사기를 떨어뜨렸다." "여자도 군대 보내라." 등의 공격적 주장들이 쏟아졌다. 어쩌다 여성 네티즌이 논쟁에 끼어들면 남성 수십명씩 달려들어 목사발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남녀간 성 대결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젊은 남성들은 모두 꼭 군대에 가야 하는가? 현재의 병력규모와 징병제도는 안보상황에 견주어 적절한 것인가? 군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남성들이 벌였던 사이버 대공세는 징병제가 안고 있는 이런 본질적 측면들을 상당부분 간과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 등을 마구 두들겨패 자신들의 기득 이익을 지켜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49년 병역법 제정으로 육군 2년, 해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면서 도입된 뒤로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은 채 골간이 유지돼왔다. 한국전쟁, 68년 1·21 사태 등 안보상황에 따라 군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밖에 제도 자체를 놓고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정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다. 97년 대선에서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가 최대 쟁점으로 등장했으며, 최근에는 고위층 자제의 병무비리 수사가 총선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떠올랐다. 군가산점 위헌 논란에는 수많은 네티즌이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징병제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이 심상찮다는 점이 확인됐다. 유력층 자제와 서민층 자제간의 형평성, 현역과 단기사병(방위) 복무자 또는 미필자간의 사회적 차

별, 남녀 평등 논란, 인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 등 징병제가 지닌 근본적 문제점들이 하나씩 공론의 무대로 올랐다.

국민들의 불만이 심상찮다

안보환경도 크게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남북 관계는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의 북핵 위기에 비견되는 미사일 위기가 발생했으나, 북·미간 대화를 통해 해결점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현 정부는 잠수함 사건, 서해 분쟁 등에도 불구하고 대북 햇볕정책 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는 병역문제를 둘러싼 표피적 논쟁을 징병제나 모병제나, 또는 한반도의 군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등의 좀더 근본적 주제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진보적인 평화운동단체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가 인터넷상에 '군축 토론마당' (www.peacekorea.org)을 마련해 넉달째 운영중이며, 3월18일에는 한국여성학회가 '군가산점 제도의 쟁점과 실태'라는 학술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군가산점 논란을 문제의 본질로 심화시키자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었다.

젊은층들의 움직임은 이들이 징집 당사자라는 점에서 좀더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어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아주대, 수원대, 서울시립대 총학생회와 여성운동모임, 장애인 인권단체 등 40개 대학의 크고 작은 조직들은 올해 초 한 데 모여 '실질적 군문제 해결과 군가산점 존치안 철회를 위한 전국 비상대책 위원회' (이하 '비대위')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이름에도 명시했듯이, '평등권'에 위배되는 군가산점 제도 폐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군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당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총선 공약을 통해 의무복무기간 단축에서,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자는 주장, 징병제를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앞다퉈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당으로서 민심의 심상찮은 기류에 나름대로 응답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공약, 징병제+모병제

민주당은 3월14일 총선 공약을 통해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유급병 지원제(직업군인) 도입과 연계해 사병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길 선거대책위 정책위원장은 "당국자 회담 제의를 비롯한 최근의 남북관계 흐름으로 볼 때 '평화체제 진전'의 계기는 올해 안에라도 가시화될 수 있다"며 "그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과감히 단축하면서 직업 기술병을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공약은 집권여당으로서 모병제 도입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이 주목된다. 장교와 하사관까지만 직업군인이 있는 현재의 제도를 바꿔, 사병까지 모병제 직업군인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공약대로라면 우리나라 국방인력 충원제도는 모병제+징병제 혼합체제로 근본적인 성격 전환을 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기술병과를 중심으로 직업병을 모집하는 방안을 만들어냈다. 해당 병과 의무사병으로 복무한 사람 가운데 장기근무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으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당연히 '직업'에 걸맞은 급여가 지급된다. 계급 제도는 기존의 의무병은 상병까지 달다가 제대하고, 병장을 직업군인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민주노동당도 징병제+모병제 혼합체제를 주장하지만, 강도는 더 높다. 민주노동당은 군사 분야 공약에서 △18개월로의 복무기간 단축과 △지원병제 확대를 제시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와 같은 비대한 군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통상 적정 병력규모를 인구의 1% 이내로

보고 40만명 이하 규모로 감축해야 한다” 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제안 배경으로 군병력의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을 들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99년의 한국 국방비는 13조7490억원 가운데 경직성 경비인 운영유지비가 69.9%인 9조6087억원, 이 가운데 인건비가 5조604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24만명의 병력을 지원제로 운영하는 일본 자위대는 운영유지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가 64%로서 한국의 그것보다 적은 상태다(표2). 이것은 67만명에 이르는 비대한 군조직 운영에서 파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문서는 “징집 사병이 증가할수록 이를 통솔할 장교·하사관 조직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군대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보다 좀더 진보적 노선을 자처하는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징병제를 구시대적 냉전체제의 대표적 잔재” 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청년진보당은 징병제의 전면 폐지와 모병제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진보당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해도 방위비가 증가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징병제가 인건비가 싸게 드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60만명의 청년이 군에 가지 않고 2년여 동안 경제활동을 벌일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생산이 기회비용으로 상쇄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원병제로 필요한 추가 인건비는 군대에 가지 않는 다수의 청년들이 내는 경제활동 지불비용으로 간접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세 정당은 편차는 어느 정도 있지만 모병제 도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병역문제를 해결하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6개월(육군 기준)인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줄이자는 안을 내놓았다.

쟁점화 꺼리는 국방부

한나라당 분석에 따르면 24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면 기본적으로 국민 병역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학 재학생의 경우 전역 뒤 복학하기까지 공백을 줄이는 등 청년들의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 단축 방안으로는 기술분야의 사병을 장기복무 하사관으로 대체함으로써 기술군 중심의 전력재편을 촉진하며, 방위력 손실도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이러한 제도 변경이 당장 시행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당 관계자는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정예강군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남북한 관계변화와는 큰 관련이 없다” 며 “남북한 평화구축 진전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민주당의 공약은 잘못된 것” 이라고 비판했다.

민주국민당은 병과와 배치장소 등 근무여건에 따라 24~26개월로 복무기간에 차등을 주자는 흥미로운 공약을 제시했다. 지금은 백령도에 근무하거나 서울에 근무하거나 복무기간이 똑같지만, 앞으로는 편하고 인기있는 병과나 근무지는 좀더 기간을 길게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짧게 해주자는 것이다. 민주국민당은 이로써 입대 뒤 병과 및 부대 배치에 따른 병역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유력층의 자제가 아니라서 오지에 배속 받았다는 불신감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어떤 입장일까? 국방부는 일단 민간단체와 정당을 가릴 것 없이 이 문제가 쟁점화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 복무기간 단축 또는 징병제 개선이라는 현실적 문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군축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 등을 경계하는 것이다. 병역제도 개선론 가운데는 현재의 방위비 수준 유지를 전제로 군전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즉 군축 자체를 주장하지는 않는) 견해에서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방위비 삭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는 견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갈래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병력 절반 툇 잘라도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심지어 복무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한 여당의 당정협의 요청에도 적지 않아 부정적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모병제 도입 등은 전혀 검토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국방부 논리는 병역자원 수급전망 도식(표 3)으로 요약된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 2001년에는 징집 가용자원이 각각 37만명, 38만명으로 군에서 필요한 인원(현역, 전경, 경비교도 포함) 31만2천명을 초과한다. 이에 따라 남는 인적 자원을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근무자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2002년부터는 가용자원이 감소하기 시작해 2005년 30만4천명, 2006년 29만1천명, 2007년 28만5천명 등으로 소요인원을 밑돌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로서는 대체근무자를 줄이거나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현역병 확보대책이 오히려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논리는 의문을 낳는다. 국방부도 10~15년 이내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예상하고 “기술집약형 군 구조에 적합한 인력규모 및 구성으로 조정”하는 것을 전력 재편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의 점진적 감축(현재 수준의 81%) 및 해·공군 증원 △간부(장교·하사관) 위주의 인력구조로 조정(현재의 24%를 30% 이상으로)한다는 정책과제(국방부 정책문서 ‘21세기의 국가안보와 국방비’)를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러한 중·장기 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에 따라 내년부터라도 그에 맞는 인력 수급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 늘 31만여명이 고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곤란하다. 그게 아니라면 중·장기 목표는 군 개혁 요구를 피해가려는 걸치레 빈말로 그칠 수 있다. 한마디로 국방부 스스로 뭔가를 바꿔나갈 태세가 엿보이지 않는 것이다.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는 이렇게 진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군의 효율화이다. 지금의 한국군은 60여만명 가운데 35만명이량이 후방 지원 행정·기술병 등이다. 실제 전투력과 무관한 인력이 대규모로 붙어 있는 꼴이다. 시스템만 제대로 갖추면 30만명만으로도 효율적인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3년 계획만 세우면 지금부터라도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다. 군대를 좋아해 가고 싶어하는 밀리터리 마니아들도 많다. 문제는 장군들이 자신의 밥그릇 때문에 사병을 줄이는 데 저항하는 것이다. 미국은 국방장관을 민간인이 한다. 미 국방성의 스태프도 95%가 민간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다. 자신들의 밥그릇에 얽매이지 않는 민간 전문가들로 국방부를 새로 짤 때 군 개혁이 가능하다.”

또다른 군사평론가 정창인씨의 진단도 결론은 같다. “청년 인구층이 60여만명의 병력규모를 유지하는 데 부족해지는 시점이 곧 온다. 그래서 더더욱 모병제로 전환해 군을 전문직업군화해야 한다. 현재 조건에서도 모병제+징병제는 당장 가능하다. 각종 특례제도를 없애고 기본체력만 갖춘 사람은 모두 입영시킬 경우 복무기간을 지금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숙련도가 요구되는 병과가 생길 텐데, 이들을 중심으로 모병제를 하면 된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군의 정예화·전문화를 위해서라도 모병제의 장점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왔음은 분명하다. 복잡한 무기체계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므로 이들에게는 당연히 민간기업 수준으로 보수를 올려야 한다. 징병제는 법규를 내세워 인력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싸게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값이 낮다보니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단순인력 수요만 과잉팽창해 국가적 인력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군의 정예화·전문화를 위하여!

그러나 모병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우리 사회 여건에서 어떤 대우로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가 불투명하다.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위화감을 유발할

여지도 없지 않다. 실제로 네티즌들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를 보면,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아무리 대우를 좋게 해주어도 군에 가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이 징집제를 유지하는 데는, 지원제로 전환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떨어지는 동독 출신 위주로 군대가 짜일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요인도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주제를 둘러싼 공개적인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군 당국이 의제 설정 자체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심지어 집권여당과의 당정협의조차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사태는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징병제의 개선 여부를 포함해 병역제도의 골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군 가산점 논란에 이어 총선에서 관련 공약들이 쏟아진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토론이 전개되길 기대해볼 만한 시점이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mail.com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입력일 : 2000/03/22 15:52:04

제 목 : [표지이야기] 세계는 '프로페셔널 군인' 시대

지원병으로 편성된 21만5천명 규모의 영국군과 징병제를 토대로 한 60여만명 규모의 한국군은 어느 쪽이 더 강한 군대일까?

영국군과 한국군은 각기 처한 안보상황이 다르다. 영국군은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으로부터의 침공위협이 현저히 약화된 데 비해, 한국군이 짊어진 부담은 그보다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 군대의 전투력을 비교할 때 한국군의 손을 들어줄 사람은 적을 듯하다. 이렇게 본다면 전력은 단순히 병력 숫자나 복무기간의 문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다.

'냉전 퇴조' 시대상황 반영

영국군은 57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로 전환할 당시 72만명에 이르던 병력규모를 군구조 개혁을 통해 꾸준히 감축했다. 2000년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인 '전선 우선 정책' (Front Line First)은 전투부대 우선의 군사력 재편을 통한 국방비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급 사령부와 후방 지원부대의 통·폐합을 통해 비능률 요소를 제거하고, 병력규모를 축소하되 절감된 예산으로 첨단 무기체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프랑스는 96년 5월 각료회의에서 '1997~2002년 군 개혁법'을 채택함으로써 군 개혁작업을 본격화했다. 이 법은 당시까지 존속하던 징병제를 지원병제로 전환함으로써 50만2천명 규모의 병력을 35만2천명 규모로 감축하도록 했다. 지원병의 복무기간은 10개월로 정했다. 프랑스는 이와 함께 핵 전력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전력을 오히려 강화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남유럽과 지중해 수송로 방어 임무가 부여되어 있다. 또한 북아프리카, 중동 등 분쟁지역에 종종 병력을 파견하는 등 대외지향적 군사전략 때문에 유럽에서는 비교적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나라에 속한다. 그러나 이탈리아도 98년 당시 41만명에 이르던 병력규모를 2000년대에 25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군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12개월 복무기간의 징병제(공군은 18개월)를 운영해왔는데, 최근 들어 복무기간을 4~6개월로 단축하면서 직업 사병제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독일은 탈냉전 이전까지 동유럽의 침공에 대비해 15개월을 의무복무하는 징병제를 전제로 평시 48만9천명의 병력규모를 30년간 유지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 징집대상 연령의 인구감소로 문제가 발생해 90년대 초에는 한때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뒤 동유럽 붕

피로 인접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현재는 의무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인 상태다.

이런 예들을 볼 때 유럽은 징병제를 폐지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점차 전문직업군화하는 게 일반적 흐름임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 냉전적 대결상황이 점차 퇴조했다는 시대적 상황이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전력 자체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혁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도의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전문지식과 윤리의식 등을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프로페셔널 전사 집단'으로 군대를 탈바꿈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중국, 베트남, 남북한 등은 노동집약적 대병력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평론가 정창인씨는 "한국군 병사들의 상당수는 국방의무 때문에 끌려나와 몸으로 때우고 있는 꼴"이라며 "99년 동티모르 파병 당시 전투력과 규율을 제대로 갖춘 부대를 선발하다보니 결국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특전사를 차출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도 그런 배경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mail.com

입력일 : 2000/03/22 15:51:43

제 목 : [표지이야기] 다이어트, 두말하면 잔소리!

한반도 '군축(軍縮)'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군축논의는 징병제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제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해 주목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다.

현재 가장 뜨거운 군축논의 장은 바로 사이버공간. 진보적인 평화운동 단체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가 마련한 이른바 인터넷상의 '평화네트워크, 군축 토론마당' (www.peacekorea.org)이 바로 그것이다.

인터넷 토론마당, 국방부도 뛰어들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 거의 4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 토론 마당에는, 최근 국방부까지 뛰어 들었을 정도다. 구제금융 직후 나온 '국방예산을 축소해 사회복지예산으로 전용하자'는 주장에 이어 군축에 대한 찬·반양론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이다.

서보혁씨는 이 토론마당에서, 한반도 군축은 "주변 국가들의 지역적 군비경쟁을 제어하는 의미를 가진다"면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재가동 또는 이를 겨냥한 낮은 수준의 접촉이 필요하다"며 군축론을 펼쳤다.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civil@peacekorea.org)도 "현재와 같은 군비경쟁 구도가 계속된다면, 북한이 적은 비용으로도 확실한 전쟁억지력을 갖춘 핵이나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쟁 운운하는 과정에서 누가 그 이익을 보고,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를 이제는 꼼꼼이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론' (xm177e2@chollian.net)이란 이름의 한 네티즌은 "군축은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면서 특히 "우리쪽의 기갑부대가 북한군에 대해 질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공중화력은 아직 요원한 상태"라고 군축불가 입장을 밝혔다.

네티즌들의 논의가 들끓자, 3월 초에는 국방부까지 이 논쟁에 끼어들었다. 국방부는 '군비통제의 이해와 남북군비통제방향' 이름의 긴 글을 통해 "근래 남북한 군비통제 문제가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군비통제의 개념과 역사적 교훈, 남북한 안보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일부 주장은 정부의 남북 군비통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군축에 대한 이런 논의는 오프라인에서도 다양하게 펼쳐질 조짐이다. 사이버공간만큼 그렇게 활발한 것은 아니지만, 군가산점 관련 토론회나 전문가들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군축은 남북한 신뢰의 기본조건

지난 3월18일, 한국여성학회 주최로 이화여대에서 열린 '군가산점제도의 쟁점과 실태'란 토론회에서, 김창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정책실장은 "군축은 무력사용이나 사용위협에 직면하지 않도록 안보상 보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작고 효율적인 군을 위한 구조 조정을 뜻한다"면서 "남북한이 군축을 통해서 병력규모를 30만명으로 상호 감군하는 군축은 병역제도의 구조적 변혁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현 징병제에서는 해마다 35만명의 군정집자가 있지만, 30만명으로 감군하면 필연적으로 과잉공급을 초래해 결국 징병제를 지원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군축논의는 학계에서도 비록 활발하진 않지만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남북한을 합해 적정 군사력은 24만~28만명이면 충분하다"면서 "한반도 군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군사평론가인 지만원씨도 "30만명으로 군을 감축할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국방장관을 하면 모병제를 실시할 수도 있다"면서 '군축은 남북한 신뢰구축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입력일 : 2000/03/22 15:51:39

제 목 : [표지이야기] 국방의 의무를 '나의 자유' 로!

"단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군대에 끌려갈 수는 없다." 지난해 11월 말, 한국사회 또 하나의 금기가 깨졌다. '징병제를 반대하는 모임' (이하 '징반모')(zingbanmo.gazio.com)의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모임은 스스로의 성격을 '징병제의 위헌 판결을 통해 모병제 도입을 현실화하려는 N세대의 모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병제가 가능한 시점을 제시하라'

'국방의 의무'. 지난 50여년간 이 말 앞에는 항상 '신성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다녔다. 감히 누구도 '국가안보'라는 당위 앞에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그 당위를 의심하는 사람은 용공으로 매도되거나 이기주의자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징반모'의 주장은 가히 파격적이다.

"반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군복무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특히 선택의 자유)을 침해하는 만큼 각 개인이 자신의 여건에 따라 군복무를 하든, 대체근무(사회 봉사활동)를 하든, 경제적 부담(국방세)을 하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군인력 확충이란 명분 아래 자행돼왔던 초법적인 인신구속을 타파하여 국가와 개인의 관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

마치 반국가조직의 선언문 같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침해당할 수 없는 개인의 자유'를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시 할 뿐이다. '용공'의 혐의를 씌울 어떤 이데올로기적 배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국가라고 하더라도 '결코 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징반모'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징병제의 폐지와 대안적인 모병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징반모'가 지적하는 징병제의 폐해는 이렇다. 우선, 형평

성의 문제다. 성별이나 건강이 국방의 의무를 분담하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건강한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징집당하는 현실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성이나 장애인도 징집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이들은 사회 봉사활동이나 국방세 등 다양한 국방의무 분담 방법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형태이든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북한과 군축협상을 통해 최대한으로 병력을 줄인 뒤, 필요한 병력과 임금, 그로 인한 세부담 등을 산출하여 모병제가 가능한 시점을 제시하라” 는 촉구도 빼놓지 않는다.

처음에는 잠잠하던 ‘징반모’ 사이트는 올해 초 군가산점 논쟁이 터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서명운동에 참여한 사람 수는 불과 45명. 그만큼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징병제’ 를 반대하는 행동은 힘들다는 방증이다. ‘100만명 서명 운동’ 까지 밀어붙이겠다던 이들의 호기는 일단 한풀 꺾인 상태다. ‘징반모’ 사이트 운영자 배관호(23)씨는 “지금 당장 모병제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며 “그렇지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보면 언젠가는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말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징반모’ 만이 유일하게 징집제를 문제삼은 건 아니었다. 군가산점 논쟁이 ‘남녀간의 사이버 전쟁’ 로 치닫던 지난 1월부터 나우누리, ‘참세상’ 등 통신 게시판에는 군가산점 문제의 근본이 징병제에 있음을 지적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5~6개 대학, 4월에 ‘집중행동주간’

“의무복무제에서 직업군인제로의 전환은 충분히 가능한 정책대안이다.” (참세상ID shkim) “군가산점 논쟁은 중·장기적으로 평화 운동에 그 지향을 두어야 한다. 군축과 더불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나우누리ID strike93) “모병제 등 군문제에 대한 대안은 대부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나우누리ID peloyd)

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에는 사이버공간뿐 아니라 ‘현실운동’ 에서도 징병제 반대가 서서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군가산점폐지 운동을 벌여오던 단체들이 징병제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각 학교 총학생회와 여성운동모임, 장애인 인권단체 등 40개 대학이 참여한 ‘실질적 군문제 해결과 군가산점 존치안 철폐를 위한 전국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가 바로 그런 움직임이다. 이 단체는 이름에도 명시했듯이, ‘평등권’ 에 위배되는 군가산점 제도 폐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군문제 해결을 지향한다. 아직 참여단체간에 다소 입장차이는 있지만, 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징병제 반대’ 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비대위’ 는 4월3일부터 9일까지 ‘집중행동 주간’ 을 선포하고, 5~6개 대학에서 직접행동에 돌입한다. 그러나 아직 ‘징병제’ 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는 시기상조라는 판단하에, ‘군대 내 개혁’ 에 주력할 계획이다. 군대 내의 인권유린과 노동착취를 형상화한 퍼포먼스인 ‘우리는 군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가 주요행사다. 또한 ‘징병제’ 를 중심으로 한 군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공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비대위’ 에서 활동하는 정길현(25)씨는 “아직도 레드콤플렉스가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징집제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어렵다. 군가산점 폐지 운동에도 역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나면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는 해볼 생각” 이라고 밝혔다.

진정한 안보란 무엇인가

반전과 군비축소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던 ‘평화인권연대’ 의 흐름도 주목해볼 만하다.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최정민(30)씨는 “이제는 군사력만이 안보라는 생각을 버릴 때” 라며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 라고 이야기한다. ‘군사안

보'가 아니라 '인간안보'라는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처럼 서로 출발점은 다르지만 곳곳에서 '징병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문제의식의 차원일 뿐 '징집거부 선언'과 같은 집단 행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는 50년 묵은 신화. 붓물이 터지는 날이 곧 올지도 모른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입력일 : 2000/03/22 15:51:39

제목 : [표지이야기] 월급 많이 줘도 절대 안 간다?

'징병모'는 지난해 12월2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웹을 통한 여론 조사에는 항상 신뢰성의 문제가 따른다.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징병제'에 대한 여론조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조사는 나름대로 의미가 없지 않다.

우선, 징병제에 대한 찬반투표의 결과다(362명 투표참가). '당연히 모병제가 돼야 한다'가 20%,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 모병제로의 전환'이 61%였다. '모병제로의 전환을 반대한다'는 20%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에 참가한 압도적 다수가 '모병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징병제의 가장 큰 위험성은?'이라는 질문(221명 투표참가)에는 40%가 '기회(젊음)의 상실'이라고 대답했다. '평등권' 박탈이 22%, '자유권' 침해가 19%, '인권' 유린이 16%, '자존(생존)권' 위협이 3%였다.

세 번째는 '대체근무를 전제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61%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니다'라는 응답은 30%, '모른다'는 응답은 9%였다.

이에 반해, '구타나 얼차려가 없어진다고 전제하고, (모병제가 되면) 얼마의 임금을 주면 군대가 가겠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많이 줘도 절대 안 간다'가 46%로 가장 높았다.

신윤동욱 기자 syuk@hani.co.kr

입력일 : 1999/08/19 00:18:55

자료량 : 222줄

제목 : [표지이야기] 잠자는 '오니군소'

'오니군소' (鬼軍曹)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면 '귀신 같이 두려운 하사관'이라는 뜻으로 2차대전 당시 구일본군의 악명높은 하사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2차대전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해체되고, 그 이름도 자위대로 바뀌었다. 하지만 '오니군소'는 사어가 되지 않고 일본사회 한쪽에서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인들은 타인에게 냉혹하게 원칙을 적용하는 사람을 가리켜 오니군소라고 부른다.

아직도 강렬한 구일본군의 이미지

그렇다면 지금의 자위대는 어떠한가. 천황의 군대에서 '국민의 군대'로 탈바꿈했다고 자부하는 일본 자위대에 오니군소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일까.

일본 자위대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군국주의 일본의 침병이었던 구일본군의 이미지가 자위대에 투영돼, 아직도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4년 2월 총리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도 나타난

다. '가까운 사람이 자위대에 입대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찬성이 37%, 반대가 34%, 본인에 맡긴다가 20%로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하게 나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일본사회에서 자위대 장교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예를 들어 고교 동창회에서 자위대 장교나 사병이 자위대에 근무하고 있음을 자랑하는 법이 거의 없으며, 동기들 역시 이를 출세라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사회의 분위기에 또 젊은이들이 자위대에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스나가와 야쓰노리 교수(일본대 상학부)는 이렇게 설명한다. "자위대에 지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 신분이 주는 매력 때문이다. 자위대 지원자는 대도시보다 지방 출신이 많은 편이다. 사실 지방고등학교나 지방대학을 졸업해 도시의 일류대학이나 일류회사에 들어 가기는 힘들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으로 안정적인 자위대를 직장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특히 일본 자위대는 전쟁에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직업군인과 같은 위험성이 없다."

자위대 장교가 되는 길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방위대학을 졸업하고 간부후보생 과정을 거쳐 직업군인을 지향하는 길이다. 방위대학은 예비사관학교와 비슷한 것이지만, 간부후보생학교라는 1년 과정의 전문교육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군사교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4년간 이수하는 총 155단위에서 군사관련 교육은 23단위로 전체의 14.8% 정도이다.

자위대로 가는 세 가지 길

물론 제복을 입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대개 직업군인이 돼 자위대 핵심세력을 형성하고, 최고직까지 승진해 간다. 이는 한국의 사관학교 출신이 한국군의 중추를 형성하는 것과 같다. 둘째는 일반대학 출신이 간부후보생이 되는 길이다. 한국의 ROTC나 3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와 비슷하다. 세 번째는 사병이나 하사관에서 출발해 장교가 되는 것이다. 하사관에서 출발하면 대개는 사간(佐官, 한국군의 영관급 장교) 이전에 승진이 끝난다.

자위대는 복무기간에 의해서도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직업군인을 지향하는 비입기제 그룹과 단기간 복무하는 입기제 그룹이 그것이다. 전자는 장교와 하사관, 일부 사병으로 구성되고 후자는 입기제 사병으로 이루어진다. 98년 현재 자위대의 구성을 보면 비입기제의 간부와 하사관이 19만7천명으로 전체 인원 24만3천명의 81%를 구성하고 있다(<표1> 참조). 이 점에서 자위대는 철저하게 장교와 하사관 중심의 조직이다.

입기제 사병의 복무기간은 육상자위대 2년, 해상과 항공자위대는 3년이다. 2~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복무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자위대를 떠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두번의 임기를 마치면 이들에게는 하사관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에서 왜 젊은이들은 자위대에, 그것도 사병을 지원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다양하다. 부모가 자위관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입대했다는 사람도 있고, 평화유지군(PKO) 활동에 매력을 느껴 지원했다는 사람도 있다. 또 자위대에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라는 사람도 많다. 자위대에서 배나 비행기의 조종이나, 자동차 운전, 토목기술 등을 배우고 싶다는 동기가 이것이다. 이마무라 아사요 2리쿠소(2陸曹, 한국군의 육군중사에 해당)는 "체조선수 생활을 했으나 부상으로 지도자의 길을 포기하고 5년쯤 방황했다. 그런데 우연히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자위대 모집포스터를 보고 사병으로 지원했다"고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직업군인으로서의 자위관은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을까. 사병의 가장 아래 계급인 3토시(3等士, 한국군의 이병에 해당)가 월 15만6600엔을 받으며, 3토소(3等曹, 한국군의 하사)의 평균월급은 27만엔 정도이다. 또 3토사(3等佐, 한국군의 소령)는 평균 47만엔, 장군1호봉은 59만3천엔, 최고임금인 장군 11호봉은 134만6천엔을 수령한다.

자위대의 법적·제도적 제약

이런 자위관의 임금은 일본의 은행이나 대기업과 비교하면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초임이 16만엔 수준인 중소기업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도 없다. 특히 자위대 주둔지가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에 주로 분포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심한 박봉은 아닌 셈이다.

한 가장으로서 또 직업인으로서 자위대 장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고민은 거주지를 자주 옮겨다녀야 한다는 문제이다. 자위대 장교는 2년에 한번씩 전근해야 한다. 그래서 대개는 가족을 도시에 두고 가장이 혼자 '단신부임'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고민이 아닌 자위대라는 조직 전체의 고민도 있다. 그중 하나가 자위대의 활동이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다룬 <선전포고>라는 소설이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 출판돼 화제를 모은 이 소설은 북한의 특수부대가 일본 쓰루가에 상륙해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하는 가상상황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소설 속 총리는 자위대에 진압을 명령하지만 법적·행정적 절차에 묶여 진압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시간만 보내는 것으로 나온다. 한 자위대 장교는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 자위대 차량과 민간 차량이 뒤범벅됐을 경우에도 자위관은 교통정리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고베지진 때 이 점이 문제로 지적돼 지금은 긴급사태시 자위관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비행장 사용도 그렇습니다. 고베지진 때 간사이공항에 물자를 내려야 했는데 공항 책임자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지요. 민간항구에 자위대 함정이 정박하려고 해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작전중에 부상자가 생겨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가도 병실이 다 찼다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일반인이면 진료거부로 문제가 되겠지만 자위관은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 속에서 존재가치를 인정받는 것 역시 자위대의 고민이다. 특별히 우익적 성향이 강하지 않은 평균적인 일본인은 자신의 생활과 자위대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생활이 자위대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외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자위대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위대와 관계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문제는 다릅니다. 비행기의 소음문제나 사격장의 문제 등에 지역 주민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교전권 포기' 조항에 장교들 불만

자위대의 고민은 인구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현재는 장기불황으로 자위대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아 장교와 사병 모두 지원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는 곧바로 지원자의 감소와 자위대의 약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99년의 <방위백서>는 "18살 이상 27살 이하의 모집 대상이 1994년 900만명에서 2013년에는 570만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위대는 군대인가 아닌가. 이미 육해공군을 보유하고 완벽한 군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위대에 걸맞지 않은 질문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81년 11월 시오다 방위국장은 참의원 답변에서 "통상 군대는 외적과 싸울 수 있는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자위대는 외적의 침략에 방어할 수 있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만 교전권은 인정받고 있지 않다. 이 점에서 자위대는 통상적인 군대와 다르다고 생각한다" 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군대와 자위대는 법적으로 천지 차이이다.

위와 같은 해석은 일본헌법의 9조2항의 교전권 포기 조항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자위대 장교들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듯 하다. 자위대가 명확하게 헌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적은 없지만 이 조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북한 피선박 침입 사건은 자위대에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주었다. 전후 첫 무력행사에 자위대는 일종의

홍분마저 감추지 못했다. 한 자위관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그 피선박을 격침했거나 납포했다면 국제법상의 해석이나 자위대의 권한을 둘러싸고 이러저런 논란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대로 보냈던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여론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니 차후에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침입 사건은 해상보안청만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해상자위대에 그 역할이 넘어갔다는 사실도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 피선박 침입에 따른 변화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2일 <마이니치신문>은 방위청이 ‘교전규칙’에 해당하는 행동수칙을 만들어 해상자위대에 하달한 것으로 보도했다. 노로타 호세이 방위청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이 수칙에는 ‘무기사용에서의 유의사항’ 까지 들어 있어 실질적인 교전규칙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민에게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자위대의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지금도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는 곳에는 빠짐없이 자위대의 모습이 등장한다. 고베지진이 있었던 95년에는 연 157만명(830건)이 복구사업에 참가했으며, 해마다 800건 이상의 재해복구에 자위대가 투입되고 있다.

히노마루·기미가요 법안 통과 ‘호재’

일본사회 전반에 서서히 확대되고 있는 보수화 분위기와 개헌 논의도 자위대에 순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일본국회를 통과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관련 법안(국기, 국가로 인정하는 법안)은 이런 흐름의 한 반영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가 곧바로 헌법 개정과 ‘오니군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차대전 전 일본사회와 달리 전후 55년이 지난 일본사회는 다양화해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들도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제도적 장치는 완전하지 않고, 또 이 빗장을 풀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과연 잠자는 ‘오니군소’는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 해답은 일본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도쿄=위정현 통신원 wi77hotmail.com

입력일 : 2001/02/28 22:18:28

제 목 : [사람과사회] ‘국방 의무’ 라는 이름의 굴레

양심적 병역거부 등 점점 뜨거워지는 징병제 논란...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문제제기도 “힘내세요! 저는 우리 XX이 군대 보내구 바로 일주일 뒤에 출국했어요. 일주일 동안 시체였지요. 그리고 7개월째 못 만났구요. 그래두 여러분. 제 남친(남자친구)이 그러는데 편지가 제일 좋대요. 가장 힘이 난다나요? 힘든 훈련 받고 오는데 편지가 와 있으면 힘이 너무나도 난대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거면요. 편지 많이 많이 보내주시구요. 예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마세요. 파이팅이에요!”

대체봉사제 사회적 이슈로

군대 간 애인을 기다리는 여성들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는 방’ (www.waitforyou.net)에 최근 한 여성이 올린 글이다. 사이트에 들른 연인원이 41만여명에 이를 만큼 이 사이트는 인기가 좋다. 그러나 징병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제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 사이트에서만큼은, 징병제는 ‘한번도 도전받지 않아온 제도’로 보인다.

애인을 군에 보낸 여성들의 뜻이 어떻든간에, 징병제도는 올해도 여러 가지 도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뤄지는 몇 가지 논의들이 그 단초를 제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징병제에 대한 논란은 먼저 <한겨레21>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인 '여호와의 증인' 관련 기사를 내보낸 뒤 확산되고 있다. 즉, 이들에게 대체봉사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주장과 형평론방 등 사이버 공간이 논쟁의 장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여호와의 증인' 쪽에서 내세우는 종교적인 입장과는 무관하게 인권의 관점에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의 견고한 '군사주의적 안보제일주의'가 일부나마 허물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기도 하다.

특히 대체봉사제 주장은 국내의 평화운동 그룹의 광범위한 지지와 일부 기독교 단체의 호응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평화운동세력들은 3월 중순께 국내의 평화운동 단체들과 함께 양심적 징집거부에 대한 워크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군가산점 논쟁이 시작된 뒤 △유력층 자제와 서민층 자제간의 군복무 형평성 문제 △현역과 단기사병(방위) 복무자 또는 미필자 사이의 사회적 차별 △남녀 평등 논란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문제 등으로만 이뤄지던 징병제 관련 논쟁이 좀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둘러싸고 논쟁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셈이다.

징병제도에 대한 두 번째 문제제기는 징병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통해 모병제 도입을 현실화하려는 세력들의 다양한 움직임이다. 이들은 지난 50년 동안 '신성한 국방의 의무론'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했던 국가제일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며, 침해당할 수 없는 개인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징병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중 하나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 징병제와 군사주의 평가로부터 나오고 있다. 재미 여성학자 권인숙(38)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19일까지 3박4일 동안 제주도에서 한국인권재단(이사장 신용석) 주최로 열린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인권학술회의에서 '군사주의와 여성:징병제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여성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징병제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 내용이다.

“징병제는 남성성을 공고화한다”

권씨는 “한국에서 징병제도는 생각해볼 필요성조차 없었던 사회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의 여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에 끼치는 이 징집제의 영향이 결코 적을 수 없다”고 전제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시각을 드러냈다.

권씨는 먼저 우리 사회에서 징병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사건과 대법원의 군필 남성의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판결 사건을 꼽았다. “두 사건은 본질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군사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는 정도와 그것의 성별화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권씨에 따르면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기피를 둘러싼 반응은 한국사회의 3가지 기본전제를 보여준다고 한다. 첫째 모든 건강한 젊은 남성은 국가방어의 의무를 다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둘째 그 모든 남성은 국가방어의 의무를 지는 데 있어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모든 아버지는 아들들이 그 의무를 다하도록 격려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권씨는 이런 전제들이 별 이견없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현실은 강제 징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징집제가 '뜨거운 감자' 노릇을 하곤 하는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한국적 현실의 근거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또 이는 한국전쟁 이후 전쟁에 대한 구체적인 공포 이외에도 자주국방과 경제개발만이 민족생존의 길이라는 박정희식의 논리전개가 아직까지 큰

설득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정치적 지향성이나 계층성을 떠나서 강하게 존재해온 민족주의도 이런 국가안보중심적 논리의 한축이 되어왔다고 권씨는 분석했다.

권씨는 이어 “국가방어의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는 이전의 종교적인 힘이나 왕권의 힘 대신 근대적 민족국가를 구성하는 시민의 자발적 충성심의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며 “민족을 위한 제일의 희생으로 취급되는 (남성들의) 전사적 희생은 군대 안팎에서 그 사회의 군사화된 남성성을 부양한다”고 지적했다. 즉, ‘남성을 위한 제2차 학교’로서의 징병제도는 △10대의 방황과 사회질서에 대한 저항을 끝내고 조직화된 시민사회속에서 협조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있는 남성이 되었음을 알리는 확인서임과 동시에 결국 △군가산점과 더불어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의 위치를 더욱 공고화하는 특권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권씨의 분석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같은 군부대 출신 선후배들이 함께 참석해 추억을 회상하며 우의를 다지는 형식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TV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존재인지도 모른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부정적인 평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훈훈하며 자랑스러운’ 분위기다.

매매춘 문화와도 결부

권씨는 이같은 성 차별화된 징병제 속에서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구실과 어머니에게 주어지는 구실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회창 후보 아들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이 군대에 가서 국가방어의 의무를 다할 것을 격려함으로써 자신의 부성적 본능을 극복하는 이성적 인간으로 표현되기를 기대받지만, 어머니는 다분히 감정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가장 극적인 예는 인기리에 방영됐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우정의 무대>에서, “‘그리운 어머니’ 코너로 꼽힌다. “신기하리만치 징병제의 감정적인 부분에서 아버지는 사라진다.”

이 부분에서 권씨는 묻는다. 만약 대통령 후보가 여성이었고 그 여성 후보의 아들이 징집이 면제되었다면 여론을 어찌했을 까라고. 권씨의 대답은 냉정하다. “아마도 그 후보에 대한 비판은 이회창 후보에 대한 비판의 정도보다는 덜하였을 것이다. 그 여성 후보의 행동은 절박한 어머니의 자식사랑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후보는 바로 그런 이유로 이성적이고 책임있는 멤버가 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의심을 받으면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권씨는 이와 함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제기를 던진다. 첫째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가 나타내는 한 특성인 강한 남성적 동류의식의 한 근거를 군대경험이 획득하는 연대감이 제공한다는 것, 둘째는 군사화된 남성성과 성폭력이나 지나치게 비대화한 매매춘 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 권씨는 “‘법이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만연해 있는 성적 불평등이나 다분히 폭력적인 남녀간의 관계, 100만이 넘는다는 매춘여성의 존재도 이 징병제도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는다”면서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씨의 발표를 계기로 징병제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것은 현존하는 여성 문제를 좀더 역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작업이라는 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어쨌든 1949년 병역법 제정으로 육군 2년, 해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면서 도입된 뒤로 별다른 도전을 받지 않은 채 골간이 유지돼온 징병제도는 올해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김창석 기자 kimcs@hani.co.kr

입력일 : 2000/04/05 11:32:08

제 목 : [독자와 함께] 독자의 주장/병역제도는 바뀔 수 있다

301호 표지이야기 '징병제를 흔들어라' 를 기획한 목적은 징병제를 흔들어 당장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것보다는 현재 우리의 국방현실과 병역제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에서 첫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뜻이었다. 그럴 배경은 사실 적지 않았다. 군가산점 논란을 통해 밑으로부터의 요구들이 대단함이 확인되었고, 남북관계도 서서히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정당들이 저마다 복무기간 단축과 징병제+모병제 일부 병용 가능성 등을 제기한 것도 그런 배경이 됐다.

어떠한 제도도 절대적으로 진선진미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 상황과 맞물려 내려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병역제도 역시 끊임없이 그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징병제를 흔들어라' 가 보도된 뒤 정치권과 민간단체들 사이에서는 일부 후속 움직임이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장 이상희 의원은 3월29일 국회 '위빈식당에서 '사이버 밀리터리 서비스를 통한 지원병제 도입 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보통신 분야 전문인력을 재택근무 등의 형태로 군에 복무하도록 하자는, 다소 꿈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논의는 해보자는 것이었다. 진보적인 평화운동단체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는 5월중 병역제도에 관한 사이버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박창식 기자 cspcsp@hanimail.com

이번 기획은 <한겨레21>이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왜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병무비리가 재연되는가를 추궁할 게 아니라 이러한 비리가 일어나는 근본원인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징병제의 비효율성 문제는 원인 중 하나이다.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이라 해도 군의 군살빼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박세민/ 부산시 남구 대연5동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생각해보자. <한겨레21>이 보도한 여론조사에서도 말했듯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안 간다는 사람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에 가는 사람은 결국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계층이 되기가 십상이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역시 돈있는 사람이 '돈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차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용병제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닐지. 또한 우리나라가 그 '용병' 이라고 고용할 경제력은 있는가를 생각해보자.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다 교육이다 해서 국가적인 장기투자가 이뤄져야 할 곳이 많은 터에 모병제의 국방비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물론 지금 우리 군대가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군축이 필요하다는데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 축소된 군대라도 모병제로 유지할 경제력이 과연 가까운 시일 내에 갖춰질 수 있을까. 모병제란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국가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은 모병제 논의는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옥중수 okjong@freechal.com

입력일 : 2000/03/22 15:52:05

제 목 : [만리재에서] 징병제의 미덕과 악덕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TV 내무반 신고합니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중년의 나이가 된, 같은 내무반 출신의 전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근무한 부대에 들러 병영생활을 하면서 '짬밥' 도 먹고, 훈련에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어느덧 배

에 군살이 붙어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지만 표정은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아련한 추억일 뿐입니다. 이 프로는 군대에 다녀온 한국의 남성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향수 같은 것을 자극하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 아닌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군에 다녀왔다는 것은 남자들에게 일체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질세라 무용담을 풀어놓느라 시간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 '남자는 역시 군에 다녀와야 해' 로 모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신성한 국방의무' 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불순한'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절대불변의 진리로 여겨져왔던 징병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당돌한 질문입니다. 이런 주장에는 징집대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젊은층은 물론 학계나 군사전문가들도 가세합니다. 더욱이 집권여당도 비록 "남북한의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처음으로 모병제 도입의지를 밝혔습니다.

징병제를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는 형평성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성별이나 건강이 국방의 의무를 전담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의문제기입니다. 남녀간의 성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던 군가산점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징병제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도 덧붙여집니다.

사실 따지고보면 징병제의 최대 미덕은 아마 '평등' 일 것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재산이 많은 적든, 평등하게 군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낱 이론일 뿐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총선 가도의 최대 화약고로 등장한 정치인 병역비리에 대한 수사는 일단 제쳐놓읍시다. 군대라는 게 입영에서부터 근무지 배치, 보직 부여에 이르기까지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누구나 피부로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평등의 원칙은 오히려 위화감의 진원지가 되고 맙니다.

징병제 재검토 필요성은 전력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제기됩니다. 지금처럼 '양' 위주의 군대운영에서 '질'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이야기지요. 이런 논의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군축 문제로까지 확장됩니다. 남북한이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비극적 상황을 과연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입니다.

물론 군복무제도의 문제는 한마디로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든 사안입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 화두를 붙잡고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때라는 점입니다. <한겨레21>이 이번호 표지 이야기(26쪽)로 징병제 문제를 다룬 것도 이런 고민을 함께 시작해보자는 뜻에서입니다.

한겨레21편집장 김종구 kjg@hani.co.kr

<시사저널>

입력일 : 2000/07/20 18:35:53 출판년월 : 00년 07월 19일

제 목 : [사회] 군은 동성애자 인권의 사각지대

국방부, 정신장애자로 분류...

성폭력상담소 "서로 합의한 관계는 인정해야"

성전환자(트랜스 젠더)인 ○씨, 그의 군생활은 끔찍했다. 자기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군대는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남자들 사이에서 웃을 벗고

신검을 받아야 했고, 남자들 사이에서 부대끼며 먹고, 자고, 씻어야 했다. 그가 군대 생활을 못버티고 결국 '커밍 아웃'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알리는 일)을 했을 때는 온갖 멸시와 비웃음을 감내해야 했다. 정신 장애 판정을 받고 의가사 제대를 하기는 했지만 그의 정신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어떻게 군대를 가게 된 것일까?

사실 군은 동성애자에 대해서 '입영 차단' 을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그래서 입영 신검 때에도 동성애자를 '색출' 하기 위해 인성검사(KMPI)를 통해 여성적 성향의 정도와 '성적 도착증' 의 정도를 파악한다.

군이 이렇게 동성애자의 입영을 차단하려는 이유는 국방부령 493 제11조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 기준' 에서 동성애를 성적 선호 장애(동성애자)와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자)라고 해서 일종의 정신적 장애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군대에 가고 있다. 왜냐하면 징병제인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복무를 면제받으려고 하는 것을 막는 데 더 주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공식으로 동성애자의 군복무를 허용하는 미국과 다르다. 모병제인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막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입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일종의 특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완벽하게 성전환 수술을 한 성전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군에 입대하게 된다.

면제된 동성애자 거의 없어

성전환자인 경우도 군복무를 면제받기가 쉽지 않다. 성전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술진단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성전환자 중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수술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한 번 수술에 2천만원 정도 드는 수술을 여러 번 해야 하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수술진단서가 없는 경우 보증인 3명이 인감증명을 첨부해 자신이 성전환자임을 증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자신이 정신적 장애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 취업은 물론 재산 소유까지 제한 받게 된다. 즉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정신병자임을 인정하면 사회적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성전환자와 달리 동성애자들은 대부분 군에 입대하고 있다. 동성애자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동성애자 인권운동 단체인 '친구사이' 상담원으로 있는 이 아무개씨(24)는 "훈련소에서 인성검사를 통해 몇 명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들은 따로 의사의 진단을 받거나 면제되지 않고 훈련을 끝까지 받았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동성애자 단체가 밝힌 바에 따르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군복무가 면제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7월12일 고려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사람과 사람' 인터넷 게시판에는 '군대에서 일병 휴가를 나온 JD형의 환영 모임과 YD형의 제대 축하 모임을 한다' 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기도 했다. 동성애자에게 군복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군이 공식으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의 동성애는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는 육군의 '성적 군기문란 사고 방지 규정' 의 동성애 금지 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상담소는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동성 간의 관계 중 성폭력이 아니라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에 따른 권리이지 처벌 대상일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다.

고재열 기자 (scoop@e-sisa.co.kr)

<주간동아>

입력일 : 2000/11/08 15:31:18

제 목 : 유럽 징병제 폐지 바람... 젊은이들 병역 고민 끝

발행일 : 00/11/16

중세사회 이후 철통같이 지켜졌던 유럽의 징병제도가 유럽연합의 구성과 함께 연이어 폐지되고 있다.

이탈리아 의회는 최근 군대 지원제를 장려하기 위해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침략 이후 계속된 징병제를 압도적인 표차로 폐지했다. 이로써 10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했던 이탈리아 젊은이들은 200여년 만에 처음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셈이다. 1985년 이후 출생한 이탈리아 젊은이는 이제 전시상황이나 국제적 위기 상황을 빼고는 징집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

이탈리아 정부는 모병제 전환과 함께 군인들의 월급을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징병제의 폐지에 따른 병력의 질적 저하를 막고, 전문성을 갖춘 군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다. 월급인상에 따라 현재 27만명 수준의 이탈리아 정규군은 19만명의 자원 병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지만 미국처럼 모병제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이탈리아의 모병제 전환은 유럽 국가들의 잇따른 징병제 폐지에 자극받은 것으로, 프랑스는 일찌감치 2002년부터 징병제를 폐지하고 전면 자원제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페인도 2002년부터 모병제를 실시, 현재 17만5000명인 정규군을 2003년까지 16만8000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군 병력 변화를 위해 독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은 병력을 줄이고 징병 규모도 상징적인 수준까지 낮출 계획이다. 우선 징병 규모를 현재 13만명에서 3만명으로 축소하고 34만명인 정규군을 24만명으로 줄이는 대신, 신속 대응군을 5만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린다는 게 독일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국제 군사전문가들은 냉전 종식으로 군사적 위협이 감소한데다 기동성을 요구하는 현대전쟁의 특성상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징병제보다는 신속대응군 체제를 선택하는 국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양섭/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lailai@donga.com

<한겨레신문>

입력일 : 2001/02/13 01:12:14

제 목 :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일제지배 이래 냉전시대를 통해 매카시즘의 광풍은 우리의 정신을 불구기형으로 찌그러트려 놓았다. '아카'(赤)가 빨갱이란 말로만 바뀐 채 일제시대 고문경찰은 노덕술을 대물림해 이근안까지 왔다. 앞으로 누가 새로운 노덕술로 나타날지 아직도 위협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일그러진 추한 꼴은 사상과 신앙에서 이의제기자를 철저히 배척하는 사회 불문율이다.

결국 우리는 시민사회 이전의 암흑시대를 살고 있다. 반공과 애국이란 간판으로 독재와 부패가 득권 질서가 온 민중을 쇠고랑을 채운 독재시대의 유산을 안고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독일헌법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졸렬한 상식은 고개를 가

우뚱하게 한다. 징병제 시행 당시 미국 병역법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것도 냉전시대의 매카시스트 뿐만 아니라 보통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잘 납득이 안간다. 왜냐하면 우리 법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위반이나 균형법의 상관명령불복종의 죄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감옥에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졸렬함

여기서 더욱 우리 상식(?)을 거슬릴 일은 미국헌법 아래선 양심적 병역거부와 함께 그 정반대의 성질인 '인민무장의 권리'를 건국의 아버지가 헌법에 보장했다는 점이다(헌법 수정2조). 이 인민무장권은 압제에 저항할 인민의 고유의 권리와 관련이 있다. 악법과 폭정에 대항하는 인민의 저항권과 시민 불복종권의 근거는 일찌기 1776년의 독립선언에 명시되었다. 인민의 무장을 하는 권리가 인민이 무장을 거부하는 권리와 같은 차원의 자유의 정신에서 유래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시민정신의 원류를 내 것으로 해 내어야만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지니게 되고 또 지켜낼 수 있다. 양심 사상의 자유가 제자리를 못찾는 한에선 시민사회나 시민국가와, 개인의 위상은 애당초 없는 것이다. 헌법이 국민을 주권자라고 정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주권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허상의 도깨비 귀신에 홀려 인권이란 제도가 실종되었다.

고민 찾을 길 없는 판결문

한국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국방의 의무를 들어서 단죄한다.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양심에 따른 도의적 의무와 실정법상의 국가의무가 갈등-충돌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초실정법적 자연법적 의무란 문제를 범조문의 형식논리로 가볍게 지나쳐버리는 법원은 세계에 우리나라 법원 정도일 것이다. 국가관과 법철학의 '심각한 문제제기'를 통해 개인의 신앙자유와 권력의 법적 강제와 한계가 논구되어야 한다. 권력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의 판결에는 이것이 없다. 다음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정법 위반의 범죄로 처벌과 강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원천적 박탈 같은 야만적 유린은 용납될 수 없다. 공권력은 개인의 신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대한 배려를 해야한다. 이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역의무가 있다. 다른 선진국이 모두 이를 강구하는데 유독 우리만 몰라라 하고 목살하고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정도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서 처럼 개인의 양심 사상의 자유를 위한 투쟁에 목숨을 내건 대중적 전통이 부족했다. 조선말 대원군 집정하에 천주교도의 순교나 일제하 신사참배거부 투쟁의 순교를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런데도 주자학 일변도의 나라님 질서에서 식민지 암흑기를 거치면서 신앙 사상을 독점관리하는 전제 권력에 순치되어 왔다. 더욱이 독립되었다는 마당에서도 냉전시대의 매카시즘의 광풍이 시민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자유롭게 믿고 생각하여 자기를 주장하는 기백을 꺾어버렸다.

소수 이단자 보호해야

지금도 우리는 말썽많은 '이단아' 옆에 있다가 '날벼락'을 맞는 봉변을 당할까 허둥대며 몸조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예적 굴종의 지속으로는 시민이 될 수 없다. 우선 소수 이단자의 양심신조를 법률이 보호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대 전기를 내디뎌야 한다. 그래야만 냉전논리로 불구기형이 된 정신의 제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소수의 이단아에 대해 박해만 하지 말고 법률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건전한 정상적 상태를 회복할 때다. 바로 그것이 인간 복권의 시작이란 것을 새삼스럽지만 실감하고 재확인할 심각한 결단을 할 때라고 본다.

한상범<동국대 법대 교수>

“징집거부권, 더 많이 알려야 한다”

세계의 평화단체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들이 한국에 모여 ‘감히 징병제를 논하다’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3월17일 오후 2시30분, 파주의 한 연수원에는 배낭을 멘 사람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50명의 참가자들 속에는 평화단체와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활동가들, 대만의 입법위원, 남미 콜롬비아의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고루 섞여 있었다. 미국친우봉사회(AFSC)가 후원한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징병제와 군복무의 실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참석자들은 이 워크숍의 부제를 ‘감히 징병제를 논하다’로 붙였다. 반세기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은 1박2일 내내 비로소 말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폭격기 조종석에 앉은 예수?

워크숍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창수 실장의 ‘현행 징병제와 군복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기초발제로 시작되었다. 김 실장은 형평성의 위기, 신장된 인권의식과 군대의 가치의 충돌 등 징병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직업군인 16만명과 지원병 14만명으로 구성된 병력 감축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그는 정권안보가 아닌 국가안보, 군사안보가 아닌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 안보를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대만의 치엔시치에(簡錫皆) 입법위원은 대만의 대체복무제를, 콜롬비아에서 온 리카르도 핀존(Ricardo Pinzon)은 중남미의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 대해 설명했다(상자기사 참조). 참가자들은 특히 대만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군대인권, 군사주의문화 등 징병제의 문제점이 두루 다뤄진 이 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집중적인 논의 주제였다. 들쭉날쭉한 18일 오후 회의에서 이대훈(영국 브래드포드대학 평화학 전공)씨는 국제법에 비취본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소개했다. 그는 한 평화운동가의 수기를 인용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얼마 전 나는 공군에서 막 제대한 조카와 식사를 했다. 그는 나에게 물었다. ‘왜 평화주의자가 더 부각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 아닌가? 각자에게 각자의 길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자네, 이런 걸 상상할 수 있겠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F-104 폭격기 조종석에 앉아 도시로 향하는 모습 말일세.’”(알 존스·이대훈의 발제문 ‘인권으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덧붙이는 얘기들’에서 재인용)

이씨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다. 이 기본권은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그 타당성을 의심받지 않는다. 그는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논의하기 힘든 것은 그만큼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개인의 자유영역이 여전히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 아래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16세기 기독교 메노나이트(mennonite)파에서 시작된 양심적 병역거부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웨이커교도 등으로 확산됐으며, 냉전체제와 베트남전을 통해 종교와 무관한 ‘세속적’ 이유의 병역거부 흐름으로 확산되었다. 이씨는 덴마크를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선구적 사례로, 징집거부권이 헌법에 명시된 독일을 모범적 사례로 제시했다. 특히 종교적 이유 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이유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독일은 91년에 입영자 숫자와 맞먹는 15만명이 대체복무를 지원했다. 이대훈씨는 “유럽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확보가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냉전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 91년 국제엠네스티는 ‘징집대상자로 양심상의 이유나 종교적, 인종적, 도덕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또는 유사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확대 정의한다. 이 정의에 따라 국제엠네스티는 투옥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양심수로 간주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네트워크 구성하자”

엠네스티뿐 아니라 유엔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규정하고 각국에 대체복무제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위는 87년 결의안 46호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을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의 정당한 행사’로 규정했다. 98년 유엔인권위가 결의한 88호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고 포괄적인 결정사항이다. 유엔인권위는 이 결의안에서 각국 정부에 △병역거부로 투옥이나 반복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독립적이고 편견없이 병역거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관을 설립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의 취지에 합당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 △병역 복무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것 △난민으로 보호를 권장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회원국으로 이 결의안에 서명한 한국도 당연히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유엔인권위는 이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고등판무관실을 통해 각국 정부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법령이 없다고 간략히 보고돼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개념은 훈련을 거부하는 예비군, 반인도적 무기생산을 거부하는 노동조합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생화학무기 같은

특정형태의 무기, 3세계 침략 같은 특정형태의 전쟁에 대한 '선택적' 거부도 포함된다. 이대훈씨는 "한국전쟁에 참전을 거부한 한국 군인들, 이 전쟁을 유색인종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겨 참전을 거부한 미국의 이슬람교도 군인 등 우리에게도 오래된 전통이 있다"며 "이런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90년대 양심선언을 한 경험이 있는 참석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음에도 당시에는 그 행동이 양심적 병역거부인지조차 몰랐다"고 회고했다.

발제가 끝난 뒤 양심적 병역거부권 확보를 위해 유엔 인권절차 활용하는 방법이 집중 논의되었다. 이대훈씨는 "일단 한국 정부가 국제적 인권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유엔에 알리고, 국제재판을 통해 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유엔인권위의 '종교적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한국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해 방문 조사를 끌어내는 방법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었다.

18일 오후 3시, 주제별 토론이 모두 끝난 뒤 실천방향을 집중논의한 종합토론이 벌어졌다. 군대 인권과 관련해서는 병사인권리장전의 제작과 배포가 제안되었다. 양심적 징집거부에 관련된 실천대안도 쏟아져 나왔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이 논의되었다. "네트워크 구성이 탈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정보에 목말라한다"며 "이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와 구체방법을 알려줄 정보 사이트를 개설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여성단체 활동가는 "징집제가 중요한 문제임에도 그동안 시민운동에서 소홀히 됐다"며 "활동가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2시간의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은 징집거부를 담은 소책자 발간과 홍보에 주력하기로 합의했고, 매달 월레토론회를 기약하며 수련원을 벗어났다. 돌아오는 길가에는 '은평구 징병검사 기간'이라는 플래카드가 나누르고 있었다. 이들이 맞부딪쳐야 할 현실이다.

[박노자의 북유럽탐험] 2002년01월09일 제392호

'군대 해체'를 상상하자
'군 해산' 놓고 국민투표까지 한 스위스... 세계에 무장해제의 시기는 올 것인가

한국의 군·현대사에서 진보세력의 도전을 받아보지 않은 사회제도가 조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불평등한 세계질서를 부정하는 '정통' 좌익, 국가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아나키즘 운동, 국가의 구체적인 억압적 장치들(예컨대 국가보안법) 등을 철폐하고자 하는 각종 민중운동들도 한국 군·현대사에 그 발자취를 남겼다. 그런데 비판의 대상은 자주 됐으면서도 부정되거나 철폐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국가장치가 하나 있다. 바로 군대이다.

한국 평화운동의 태생적 한계

군대에 대한 각종의 비판이야 민간인 학살로 얼룩진 6·25 전쟁 때부터 베트남전 때의 한국군 만행들이 밝혀진 최근까지 수없이 제기돼 왔다. 군비축소 없이는 아직도 고질적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과 같은 분야의 질을 선진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적어도 진보계에서 이미 진부한 진리가 된 지 오래다. 군사문화가 현재의 상명하달식의 사회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진보를 자처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개 인정한다. 그렇게 군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됐음에도, 한반도에서는 가장 열렬한 평화주의자들도 '국방 무용론'이나 '군대 해체론'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 1차적인 원인은 분단체제로서의 한계와 중국·일본 군사대국화의 문제가 될 것이고, 2차적인 원인으로서는 애당초부터 '부국'과 함께 '강병'을 강조했던 한국 근대 엘리트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특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결국 나라의 양쪽 지배층들이 한반도의 젊은 남성들에게 총을 들게 하고 무장시킴으로써 각자의 억압체제를 강고히 하는 상황에서, 필자를 비롯한 이 상태를 타개하려는 이들도 분단체제 안에서의 평화운동의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의 필자의 가장 반가운 발견 중 하나는, 한국에서는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군대의 전면적인 부정'이 진지한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천명의 시민당 15명이 현역군인이 되는 한국에 비해 군사 인구의 비율이 1천명당 5명이 재향·현역군인인 스위스에서, 2001년 12월2일에 이색적인 국민투표가 시행됐다. 투표의 다섯 항목 중 두 가지는 매우 빠르게 세계적 뉴스토픽이 됐다. 하나는 세계 무기자본가들 사이에 한때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스위스 노총이 제안한 일체 자본·증권 거래에 대한 20%의 일괄적 세금 징수안이었다. 무기자본의 진흥을 막으려는 이 제안이 만약 국민투표에서 통과됐다면, 반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세계의 이목을 끈 두 번째 항목은 스위스 군대의 해산안이었다.

물론 주위의 인접 국가 중에서 이렇다할 만한 가상적(假想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스위스에서야 가능하다고 남의 일로 취급하기 쉬운 소석이다. 그러나 영구 중립국으로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아 유사시에 외부로부터 보호받기 힘든 스위스에서, 이와 같은 제안이 10만명의 유권자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까지 상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1989년에 이미 똑같은 군대 해산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됐던 일까지 떠올린다면, 군대의 전면적인 부정이 스위스 국민토론의 중요한 테마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파적 자유주의자들도 “해산” 요구

군대가 있어도 가상적에 대한 적개심을 주입시키는 정신교육이나 체벌과 같은 병폐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스위스에서 왜 구태여 군대를 해산하자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가? 예상 밖으로 군대의 해산을 요구하는 한측은, 다름 아닌 우파적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들의 논리는,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맹주국의 군사력만으로도 주변부의 움직임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예산이 세계군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이 60여개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일극적(一極的)인 현재의 세계에서 왜 하필이면 적대세력들의 침공에 대비해 그 아까운 돈을 낭비해야 하느냐는 것이 이 논리의 골자다.

물론 이같은 논법의 뒷받침이 되는 것은, 주변부 세력들이 침공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핵심부 세력 사이의 갈등이 언제나 평화적·합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다. 그러나 좌파의 군 해산 논리는 돈타령과 미군의 위력에 대한 확신을 출발점으로 삼는 우파와는 다르다. 좌측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징병제의 억압적인 성격이다. 군 복무 자체보다도 스위스 재향군의 야단스러운 정규 훈련은 스위스 주민들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많은 스위스 시민들이 노골적으로 “재향군 훈련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거주하려 한다”고 말한다. 훈련 기피자들을 단속하는 스위스 경찰의 태도도 전설적이다. 합법적으로 외국에 나가 살다 회의 참석차 스위스에 입국했다가 호텔에서 영등하게 ‘훈련 기피죄’로 붙잡혀간(우연히 스위스에서의 회의날짜와 옛적 재향군 훈련기간이 같았다) 스위스 기업가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일화다. 또한 스위스 시민의 집집마다 자동차가 보관되고 있는 스위스 생활의 풍속도는 일체 무기를 함기로 보는 좌파의 평화주의자들에게는 살벌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위스를 유럽의 주요 국가 가운데 ‘군대없는 국가’의 선구자로 만들 수 있었던 ‘군대 해산안’에 대한 투표는 이번에도 부결로 끝나고 말았다. 1989년에 36%의 유권자들이 군대 해산을 지지한 데 비해 이번에는 지지율이 21%에 그쳤는데, 미국의 아프간 침략이 만들어 낸 전세계적인 광적 분위기에서, 시들고 있었던 안보의식이 다시 일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결됐다고 해서 국민투표 자체를 허사로 보면 안 된다. 군대 해산안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람에 군비축소 효과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사병, 연봉이 2300여만원

노르웨이에서 군대 해산의 아이디어는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늘 정치계의 화젯거리이다. 냉전시대에는 ‘소련 침공의 위험’이라는 명분이 있어 지지를 받은 노르웨이군은 소련 몰락 이후 소련의 침공 위협을 덜게 되었다. 물론 “구소련지역의 정치적인 불투명성과 예측불가능성, 사회적 혼란의 위험성” 등으로 당분간 군대의 수명을 늘릴 수 있겠지만, 푸틴의 보수적인 국가자본주의적 체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큰 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내내 군대를 해산시켜 노르웨이를 아이슬란드처럼 ‘군대없는 북방의 국가’로 만들자는 유권자는 대략 17%에 달했다. 우파 정치인들은, 군대를 해산시키는 대신 나토 기부금을 늘려 안보분야에서 나토에 의존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노르웨이군의 기존 전략이 어차피 “침공을 며칠 동안 저지하며 나토 구원군 도착을 대기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면, 그렇게 놀라운 발상은 아니다.

이에 반하여 노르웨이 9개당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좌익당은 나토를 비판적으로 보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이의 군사협력의 강화와 국군 해산, 그 이후의 공동 ‘스칸디나비아 병력’의 창립과 구소련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와 지원을 통한 전쟁발발 위협의 봉쇄를 제시하고 있다. 방향이 서로 다르지만, 일국 국방이라는 것이 요즘 세계에서 무용하다는 의식이 상통한다. 군 해산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의 결과로 정부는 2005년까지 2만5천명이었던 병력을 5천명으로 감축하는 대대적인 군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최장기인 1년의 군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평시의 재향군 훈련을 일체 면제해주고(참고로 기혼자의 군 복무 1년간 총수당은 약 2320만원) 4개월의 단기간 복무를 선택하면 재향군 훈련의 의무를 예전대로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군 복무 기간이 4개월까지 줄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인 군 해산... 그러나 통일이 되고 한반도의 영구 중립화가 가능해진다면 군 해산의 가능성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단꿈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지난 50년 동안 군에서 희생된 수만명의 생명과 군비로 낭비돼버린 부지기수의 국부(國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박노자의북유럽탐험] 양심의 권리가 더 신성하다

징집대상자 중 10%가 ‘대체봉사’ 택하는 노르웨이, 그것조차 거부하는 ‘완전거부자’들도

서구적 근대성을 말할 때, 여러 가지 ‘보급’이나 ‘보편화’ 현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통설이 된 지 오래다. 문자 보급과 고등 교육의 보편화, 유럽 특유 전염병들의 전세계적 보급과 설탕·담배의 유럽에서의 보편화, 참정권의 전례없는 확산과 정치운동들의 보편화... 그러나 국가 권력의 고도화와 강화, 그리고 ‘국민국가’ 이념의 보급으로 인해서 보편화된 또 한 가지 현상은, 바로 국가의 합법화된 조직적 폭력, 즉 군복무였다.

‘유럽적 민주주의’와 ‘병역거부권’은 동의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이전까지 소수의 귀족 장교와 천민 취급을 받는 평민 졸병의 몫이었던 군복무는, 19세기에 와서 일체 '국민'의 '신성한 의무'로 탈바꿈하였다. 국민개병제도의 확산에, 1816년부터 군복무를 의무화시킨 노르웨이도 예외는 아니었다. 물론 별다른 전쟁을 하지 않았던 스웨덴과 합방돼 있었던 노르웨이는, 징병제를 상당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실시할 여유를 가졌다. 자연 여건이 어려운 북부지역의 주민 전원이 면제되고 대부분의 도시민들이 면제나 갖가지 특혜를 받는데다, 실제 복무에는 제비뽑기로 선발되는 소수의 인원만이 들어갔다. 이와 같은 '부드러운' 체제는, 유럽에서 군국주의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한 20세기 초까지 존재해왔다. 그러나 노르웨이식 국민개병제도의 융통성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신성한 군복무의 의무'에 반기를 든 사람들은 많았다.

살생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예수의 가르침이 신성하고, 팽창해 가는 국가가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유린한다고 믿었던 퀘이커(Quaker)와 같은 종교 소수자들은, 군복무 반대운동에 앞장섰다. 살생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그들은, 그리운 고향을 버려 미주로의 이민을 택하는 서러움이 있더라도 자신들의 내면을 철저히 지켰다. 그리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자본가들의 이득만을 챙겨주는 국가를 위해 다른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의 피를 흘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 굳게 믿었던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반(反)군복무 운동의 또 하나의 축을 이루었다. 결국 예수와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노르웨이 땅에서 유럽적 근대성의 가장 부정적인 측면인 '국가적 폭력의 보편화'가 어느 정도 견제되어, 민주적·인권적 근대의 모습이 지켜졌던 것이다.

노동당과 공산당의 끈질긴 노력으로 드디어 1922년에, 양심적인 병역 거부를 허용해주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최초의 법안이 노르웨이 국회에서 채택됐다. 이 법안 채택의 배경에는, 국내 반(反)군복무 운동의 성과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분발한 평화주의자들의 열면 투쟁의 결과로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 등지에서 통과된, 대체복사 관련 법률의 영향도 있었다. 사실 대체복사제도를 가장 늦게 법적으로 인정한 프랑스(1963), 벨기에(1964), 스위스(1996)만 제외하고는, 이미 1920~30년대에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권은, 유럽 대부분의 민주법치국가에서 보편화됐다. 사실 그때부터 병역거부권의 존재 여부는 민주 법치 수준의 주요 기준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권에 문제가 많았던 동독마저도 1964년부터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기준에 의해서 '민주국가'로서의 공인(公認)을 받아야 했던 필요성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문맥에서, 병역거부운동의 선봉에 섰던 유럽 노동운동에 대한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초기의 소련도, 상당히 오랫동안(1939년까지) 적어도 법률상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권을 인정했다. 한마디로 1920~30년대부터 노르웨이를 포함한 대다수의 유럽 민주국가에서 '유럽적 민주주의'와 '병역거부권 인정'은 동의어로 통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쟁중에도 병역거부권 쟁취투쟁

현재로서, 통계상 1년에 징집되는 젊은이들의 약 10%는 16개월(정상적 병역기간의 거의 2배)의 대체복무를 택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 봐서 대학생 중 거부의사자의 비율이 거의 절반에 달한다.

복무의 분야는 매우 다양하다. 중·고등학교에 학생간의 싸움을 방지하는 상담 요원으로 파견되어 자신의 반(反)폭력적 신념을 실천적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좌익계 거부자들이 아동구조·대외원조 기구에 취직하여 세계적 불평등 구조를 조금이나마 고치려는 자신의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와의 이와 같은 타협까지도 뿌리치고 '완전거부'의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1년에 100~200명이나 된다. 자신의 신념과 어울리는 복무까지도 안 하겠다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말을 한국에서 하면 '배부른 사람들의 장난'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완전거부자'(total objector)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보면 일리가 상당히 있어보인다. 그들은 병역의 근거인 국가의 '국민 동원권' 자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기간의 군복무나 대체복사를 강요한다는 것은, 고대 유럽에서 노예주가 노예를 부리거나 중세 동양사회에서 전제군주가 백성을 토목 공사에 징집한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반(反)민주적이고 반(反)인륜적인 폭력이다.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폭력과 타협해서 편안한 대체복사의 길로 간다는 것은, 폭력의 공범(共犯)이 되는 수치와 다를 것이 없다. "힘에 굴종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란 말은 그들의 표어다. 그러면 국가의 힘에 굴종하지 않는 대가는 보통 무엇인가?

1993년의 새로운 법에 따르면 '완전거부자'는 90일의 구류를 당할 수 있다(특별한 경우에는, 180일간의 구류도 가능하다). 그리고 물론, 전과자가 된 그들은 나중에 공무원으로서 출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불이익을 각오하고 국가와의 정면 충돌을 선택한 그들의 감옥 체형담과 법률 조인들을, '완전거부자' 협회의 공식 웹사이트(<http://pluto.wit.no/doogie/ga/huset/kmv/>)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의 신념을 같은 평화주의자 사이에서도 일종의 극단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운동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노르웨이 진보운동 전체에 대단히 다행이라고 노르웨이인들은 생각한다. 타협과 안주를 체질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최근에 대체복무제도의 장기적인 정상 운영으로 만족과 침체에 빠진, 노르웨이의 반전(反戰) 반(反)폭력 운동의 생명과 활력이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최초의 대체복무법(1916년)을 쟁취한 영국의 평화주의자들은, 냉전도 아닌 열전(제1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 군복무를 거부하여 영창에 끌려가곤 하였다. 지금도 그리스와의 대치 속에서 쿠르드족과의 사실상의 교전 상황에 있는 터키에서는, 일부의 사회주의자·무정

부주의자들이 군복무를 거부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아직까지도 대체봉사법이 없는 터키에서 이 법이 채택된다면, 지금과 같은 '전쟁 속의 병역거부운동'의 결과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사적 파시즘이 이미 일상화된 군국주의 국가 이스라엘에서도, 아랍권과의 끝나지 않는 대치 속에서도 극소수 양심 분자의 병역 거부 투쟁은 끈질기게 지속된다. 그 결과로, 대체봉사제도가 이미 부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국가간의 대치 상황이나 전쟁은 대체근무제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제도의 쟁취를 위한 투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아닐 것이다.

한국에는 왜 아직도 없는가

그러면 한국에는 아직 대체봉사제도가 없는데,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진보진영에서조차 희미한 근본적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보통 이와 같은 질문을 한국 지식인에게 하면 '전통적인 국가주의'를 타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전통 시대의 말기에 조선 천주교 신도들이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자기 희생의 정신을 보여, 양심의 자유를 위한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지 않았던가? 개인의 양심과 신념보다 '국가적 필요성'이 한국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군사적 광기가 짙었던 일제 말기의 '국민 총동원' 시기다. 태평양전쟁 시기의 군국주의적·국수주의적 세뇌의 장치들을 남·북한의 정권이 각각 그대로 이어받아 "국가를 위한 살생도 종교적·도덕적 죄"라는 단순한 논리조차 생기지도 못하게 국가와 군대를 이진의 일본 천황과 같은 '신성불가침' 한 존재로 만들어놓았다. 지금 한국의 반(反)군복무 운동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남북의 분단과 대치 자체라기보다는, 남·북한 정권의 많은 공통점 중의 하나인 일제 식 세뇌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노르웨이 반(反)군복무 운동의 '쌍두마차'를 이룬 것은, 예수의 살생 금지를 실천하려는 일부의 기독교인과, 계급 국가를 불복종하려는 일부의 좌파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극우반공체제 상황에서 좌파 운동이 상상을 초월하는 탄압을 받았고, 대부분의 주류 종교 집단들은 일제시대의 전례대로 국가와의 전면적인 타협을 하거나, 혹 독재국가와의 충돌을 한다 해도 '신성불가침' 안보·병역의 영역을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각종의 터부들이 점차 무너져가고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세뇌의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양심과 엇갈리는 국가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의 수는 점차 많아질 것이다.

[박노자의 북유럽탐험] 2002년01월23일 제394호

감옥이 그림습니다?

감시와 처벌의 패러다임 벗어난 스칸디나비아 감옥... 더 이상 '격리공간' 아니다

근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전근대 역사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대중적인 격리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전근대 역사에는 없었던 징병제 국민 군대도 이 범주에 속하고, 학교·공장의 기숙사나 감옥·수용소 또한 그렇다. 그러면 군대, 기숙사, 감옥과 같은 격리 공간에서 동원·징용된 대중이 익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기숙사, 이성 격리 원칙 폐기

물론 일차적으로 철저한 감시를 받으면서 규율생활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시간표에 따라 동시에 같이 기상, 체조, 식사, 노동, 집단적 스포츠 등을 취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수도원에서만 부분적으로 가능했던 생활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통상 민초생활에서는 분명치 않았던 권력관계를 철저하게 익히는 것 또한 하나의 목적이다. 졸병과 상사, 기숙생과 사감, 죄수와 간수의 관계는 고향의 부모와 같은, 가정적인 부드러움이 완전히 결여된 철저한 상명하달식의 권력관계다. 마지막으로, 규율·권력과 함께 오는 것은 일상화된 하향식의 폭력이란 것이다.

일제시대 이후 한국의 학교 기숙사, 군대, 감옥에서의 폭력은 다들 익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사실 1960년대 이전 서구의 격리 공간 역시 상당히 폭력적이었다. 러시아의 경우 지금 군·감옥에서의 폭력은 20세기 초의 수준에 그대로 머물면서 많은 차원에서 악화·고질화됐다. 단체 규율 생활과 권력·폭력에 혼용된 사람이야 커다란 기계와 같은 산업사회에서 잘 적용할 수 있었고, 세계 대전과 같은 대규모의 무의미한 살육에 아주 쉽게 동원될 수 있었다.

남한과 북한의 경우에는 일제 시절과 6·25, 그리고 군 복무·학교의 단체 훈련 경험의 대중화 없이 대대적인 도시화와 공업화, 새마을운동 등의 대중적 동원 캠페인들이 과연 가능했는가? 구미의 경우도 많이 다르지 않지만 특히 남한과 북한의 경우엔 '현대성'이 막사와 단체 훈련에서 나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하나의 큰 수용소"라는 말이 1950년대까지 유명한 속담이었다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격리'의 경험은 스탈린식 현대화의 가장 중요한 뒷받침이었다. 약 20%의 인구가 감옥·수용소 경험이 있고,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나 학교 기숙사를 거쳐간 러시아에서, 체첸에서의 군대에 의한 '근대적 질서 바로 잡기'(대량민족 말살)가 인기를 모은 것이 우연일까?

그러나 요즘 스칸디나비아의 격리 공간을 시찰해보면, 이 지역은 이미 탈(脫)현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기

숙사, 막사, 감옥의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긴 하지만, 이를 '격리 공간'으로 더이상 부르기 힘들 정도로 변모해버린 것이다. 기숙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방에서 한 학생만 살게 돼 있다. 또한 서로 붙어 있는 두개의 방에서 각각 남학생과 여학생이 살 수 있다는 것은, 한국 학교 기숙사에서 아직까지도 철저히 지켜지는 이성 격리 원칙이 여기에서는 이미 폐기처분됐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군 막사도 마찬가지로, 개인용 독방 지금은 물론 출퇴근식 복부의 허락도 원칙으로 돼 있다. 개인 공간이 완전히 확보된 스칸디나비아의 '격리 기관'에서, 규율과 권력이라는 측면이 최소한으로 축소되고 폭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러나 기숙사와 막사보다도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감옥의 변모다.

덴마크의 열린 감옥 렌베크

몇년 전 러시아 신문에서는 대단히 괴이한 소식이 있었다. 구소련 출신들이 스칸디나비아 모 국가로 관광 비자로 가서는, 일부러 범죄를 저지른 뒤 경찰이 오기를 열심히 기다린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도주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스칸디나비아 감옥에 투옥돼 되도록이면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었다. 긴 형량을 열망하는 만큼 괴이한 범죄도 저지르고, 경범죄나 짧은 형량의 경우에는 출옥하자마자 본국 송환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또 범죄를 저질러 그리운(?) 감옥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과연 감옥이 얼마나 좋았기에, 감방에 대한 '귀소본능'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일까? 그 옆에 실려 있는 스칸디나비아 감옥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감옥에 가기 위해서 스칸디나비아로 떠나는 그들의 논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폭력 행위의 위험이 대단히 큰 특수 범죄인을 제외하면, 스칸디나비아 감옥의 기본 주거 단위는 하나의 큰 거실과 그에 딸려 있는 개인용 독방들이다. 거실에는 텔레비전과 식탁, 냉장고 등이 설치돼 있고, 독방마다 침대, 책상, 책장과 화장실이 있다. 원칙적으로 격리 공간이라기보다 죄수를 위한 집, 즉 개인 사생활 공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교도관 등의 직원도 죄수의 허락 없이는 그 방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일상적인 규칙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죄수가 저녁 9시까지 복도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실, 공중전화실, 그리고 감옥의 기본 복지 시설은 물론, 헬스클럽과 운동장, 사우나 등을 즐긴다. 왕래할 수 없는 심야시간에는 죄수 방의 문이 보통 잠겨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감시는 금지돼 있다. 감옥의 직원들이 폭력과 감시를 일삼는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르다 할 수 있다. 간수의 절반 이상이 여성들이고, 대부분이 심리학·법학·사회복지학 전공자들로서 죄수의 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다.

감옥이 격리 공간임을 거론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는, 죄수들이 일주일의 정규적인 몇 시간의 면회시간 외에 일년에 약 18일을 집에 돌아와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다 해도 도주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이유는 감옥 여건이 만족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철저한 개인 등록제 및 경찰제도가 장기간의 은닉생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칸디나비아 감옥 중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것으로 꼽히는 것은, 덴마크의 '렌베크'와 같은 이른바 '열린 감옥'들이다. 거기엔 담도 아예 없다. 감옥이라는 것이 죄수의 직장과 같은 농장을 포함한 작은 마을일 뿐이다. 죄수들은 아내나 애인, 가족과 낮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보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단, 밤에 '감방'인 아늑한 농가에서 자야 한다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다. 물론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죄수는 평범한 '단한' 감옥으로 이감(移監)된다.

한국 감옥의 개혁을 기대한다

그 아늑한 감옥의 텔레비전 수상료(受像料)나 전화비, 세탁비 등의 잡비는 자비로 충당해야 되는 관계로, 일을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자유 선택이지만) 거의 의무시된다. 그러나 하루 6시간 간수도 없는 농장에서 쉬어가면서 일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옥 노동'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죄수에게 주는 월급의 일부는 그의 개인 통장에 자동이체돼 출옥 뒤의 정상생활의 밑천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죄수가 학교나 대학 과정을 밟을 의사를 밝히면, 그의 노동시간은 자동적으로 단축되거나 취소된다. 월급 대신에 이제 장학금을 받는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수업 출석 없는 자습과 시험 통과만으로 학위 수여가 가능하기에, 학위를 따낸 죄수의 모습을 보기가 그리 힘들지 않다. 출옥 이후 죄수의 사회 적응을 걱정하는 감옥 직원들은 죄수의 향학열을 격려해준다. 결론적으로 '감시와 처벌'의 패러다임을 이미 벗어난 스칸디나비아 감옥의 주요 목표는, 사회생활의 적응력 부족으로 반(反)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적응 능력을 길러, 사회인으로서 회복·발전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격리 공간에서의 규율·권력·폭력에 의한 훈육을 밑바탕으로 삼았던 현대를 탈피하는 것은 산업화된 지역들의 주된 추세다. 미래에는 처벌과 규율·복종 익히기의 장이었던 종래의 감옥들도 크게 혁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감옥의 개혁 과정에서는, 죄수들에 대한 상업적인 착취를 위주로 하는 미국식 감옥 개혁의 방식보다 죄수의 전인적인 발달과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더 인간적인 스칸디나비아 방식을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 교수·한국학



사회 Society

2001.05.25 (금)

Home 연합속보 증권 경제 사회 지방 스포츠 정치 국제 정보/과학 북한

[오디오 뉴스](#)
[English News](#)

[연합 투데이](#)
[인사 부음 동정](#)

[연합시론](#)
[자유토론](#)
[기사제보](#)

Entertainment

[Music Bank](#)
[Movie](#)
[Book&Book](#)
[Television](#)

뉴스 메신저

[맞춤뉴스](#)
[연합티커](#)
[기사검색](#)

서비스광장

[날씨](#)
[오늘의 운세](#)
[복권당첨안내](#)

[경품대잔치](#)
[회원가입](#)

[회사소개](#)

[사진서비스](#)
[출판물 신청](#)
[SiteMap](#)

• 경찰

< 프리즘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논란

(서울=연합뉴스) 박진형기자 = 지난 88년 S대 전자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 모 대기업 연구소 입사가 예정되었던 홍씨(36)씨.

그러나 대학원 3년차이던 지난 90년 4월 병역특례로 군부대에 입대하면서 홍씨의 전도유망한 미래는 뒤틀리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그는 4주간 군사훈련 과정을 거부했고 항명죄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 92년 5월 출소했지만 '전과자'라는 낙인으로 대기업 취직의 진로가 막히면서 홍씨는 학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게다가 입사조건으로 대기업에서 매달 30만원씩 주던 장학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홍씨는 학원강사, 출판사 영업사원 등 갖은 일을 다해 빚을 갚았다.

몇년전부터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홍씨는 '그때 양심을 지킨 것이 지금까지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최근 홍씨처럼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입법작업이 추진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실태 = 홍씨와 같이 종교적 신앙이나 정치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집단은 현재 국내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유일하다.

이들의 교리는 '성서의 평화사랑 정신과 로마군 복무를 거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따르기 위해 총과 같은 모든 종류의 살상용 무기 사용을 부인한다'는 것.

이들 병역 해당자들은 일단 입대를 한 뒤 총기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는데, 입대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것은 '성서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속 질서에 최대한 순종한다'는 교리 때문이다.

이들은 징총거부와 동시에 곧바로 헌병대로 넘겨져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항명 혐의로 기소되며, 군사 법원에서는 한 차례 공판을 통해 간단한 사실확인만 거치고 바로 통상 항명죄의 법정최고

형인 징역 3년형을 선고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복역중인 신도의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국방부 자료와 여호와의 증인 집계결과로 1천6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홍보부대표 정운영(46)씨는 '해마다 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새로이 '군 기피자,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있고 해방후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실형을 산 신도의 숫자는 모두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 추진 = 이같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간 거의 주목을 끌지 못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수혈 거부'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낮선 행동'이 빚어낸 이질적 이미지, 그리고 지난 군사정권 시절의 안보 제일주의 등에 따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진전 등의 분위기에 맞물려 군복무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공익에 봉사하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장영달(張永達), 천정배(千正培) 의원이 입법화를 추진중인 대체복무제의 골자는 종교적 신념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현 공익근무제도로 편입하되 군사훈련, 예비군 편제 등은 면제한다는 것.

다만 엄격한 심사과정을 뒤 해당자를 철저히 판별하고 복무기간을 36~40개월 정도로 길게 잡아 일반 군 복무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방안이다.

장 의원은 '병역 의무가 개인의 양심 혹은 종교 자유와 상반될 경우 두 측면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부문에 복무시켜 개인의 종교적 양심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인적 자원의 쓸데없는 낭비를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교도소 수감자 1명당 연간 경비가 670여만원이므로 매년 100억원 이상이 병역거부 수감자들에게 낭비되고 있는 셈'이라며 '이같이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고 어차피 국방에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신도들을 유용한 업무에 봉사시키는 대체복무제는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제방안 입법화 논란=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논란의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가뜩이나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멀쩡한 무릎 연골을 수술로 도려내

는 등 온갖 편법.불법이 판치는 마당에 신앙.신념과 같은 무형(無形)의 기준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신자로 사칭하는 행위 등을 막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여타 복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국방부는 최근 장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현행 대체복무자는 4~6주간의 기초군사훈련 및 8년간의 예비군 훈련을 받으나 이 제도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모든 종류의 군사훈련을 면제받게 된다'며 '이는 형평성의 상실'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집총거부시 즉시 항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럿 있다'며 '병역은 개인이 신앙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병역거부는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반사회.반국가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 의원측은 '군사활동을 면제시키는 대신 복무기간을 연장,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심사과정에서 종교적 신념 주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실형을 내리는 등 처벌조항을 마련하면 악용 소지는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시안을 마련중인 장.천의원측은 '보수적 성향 의원들도 무조건적 거부반응이 아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입법가능성을 낮지 않게 보고 있다.

지난 15일 군 법원이 집총을 거부, 항명혐의로 기소된 김모 일병 등 여호와와 증인 신자 18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곧바로 징역 3년형을 내리는 판례를 깨고 '신중한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도 사회적 분위기 변화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병역문제가 국민들에게 대단히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종교적 동기외에도 반전 평화운동 등 정치적 동기도 인정해야 하나 실제로 이 경우 반발을 불러 제도 도입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 아래 정치적 동기를 삭제한 것도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국방부의 경우 '절대불가'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대체복무제가 실제 입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jhpark@yna.co.kr (끝)

2001/05/25 11:07 송고

[< 이전화면]

 프린트서비스

▲ top

“이 영광의 절반을 보수세력에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대체복무제 실시한 대만 민주화의 만만찮은 폭과 깊이를 확인하다

한홍구/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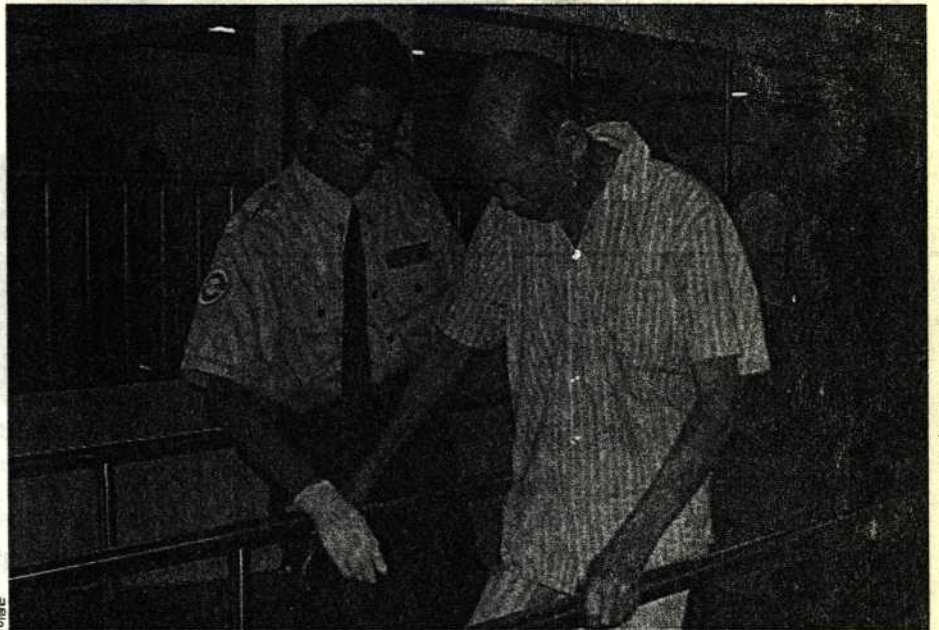
지난 7월8일부터 14일까지 대만을 다녀왔다. 올해 초 <한겨레21>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실태를 보도한 뒤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

는데,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인 대만이 지난해에 도입한 대체복무제도를 시찰하는 참관단의 일원으로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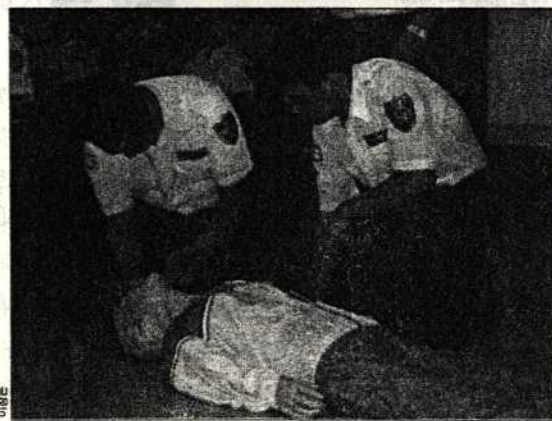
대체복무제, 기독교 반발은 없었다

우리를 초청한 단체는 대만촉진화평문교기금회로서, 대만의 체대역(替代役: 대체복무제도) 실시의 주역인 치엔시치에(簡錫堉)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이 단체의 집행장이기도 했다. 우리의 공식일정은 도착 다음날인 9일 아침 기자간담회로 시작되었다. 장소는 의원회관 귀빈실. 여의도 의사당 귀빈실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귀빈실로서는 초라하다고 할 만큼 소박했다. 의원회관 정문에는 한가한 표정의 경찰 한명만이 경비를 서고 있었고, 귀빈실 창문 너머는 바로 택시들이 지나다니는 한길이었다. 대만을 찾기 전에는 막연히 그곳도 우리 뺑치는 권위주의적인 사회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선입견은 첫날부터 조금씩 깨어지고 있었다.

다소 형식적인 간담회를 마치고 우리는 치엔 의원과 대체복무제도의 이론적 기수로 활약한 중앙연구원의 첸신민(陳新民) 교수로부터 이 제도의 도입과정과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다. 첸신민 교수는 1970년대 후반 독일 뮌헨대학에 유학할 때 독일의 대체복무제도를 보면서 자신의 조국에도 이런 제도를 실시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첸신



이홍



이홍

“노인의 집”에서 노인을 운동시키는 대체복무자(위)와 응급처치 시범을 보이는 모습(왼쪽). 사회복지시설에 젊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수천명 배치돼 대만 사회복지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

호와의 증인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천정배 의원 등이 추진하던 공청회가 보수적인 기독교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우울한 소식을 접하며

민 교수 자신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다. 그는 자기도 징역을 살 뻔했지만 다행히(?) 눈이 나빠서 병역면제를 받고 유학을 갈 수 있었다면서, 친한 한국 유학생으로부터 한국의 줄병생활이 일본군 잔재가 남아 있어 몹시 힘들다는 사실도 들었다고 회상했다.

첸신민 교수는 입법 당시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을 거부하여 수감중인 사람은 한국의 1500여명에 비해 훨씬 적은 60여명으로, 여호와의 증인 문제는 결코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첸 교수는 대만사회가 사회보장과 국방력 개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했고, 여

떠난 우리 참관단은 대만에서 대체복무안이 추진될 때 기독교계의 반발은 없었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뜻밖에도 대답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여호와의 증인 총본부를 방문했을 때도 설명은 마찬가지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인인 테리 리블즈는 이 법안이 포괄적인 하나의 인권법안으로서 제안되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 역시 찬성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장, 군 장성 출신이 아니었다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일정은 우리나라의



병무청격인 역정사(役政司)가 책임을 졌다. 뜻밖에도 역정사는 수도인 타이베이에 있지도 않았고, 또 국방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내정부(內政部) 소속이었다. 역정사가 내정부 소속인 까닭은 청년들이 입대 이후에는 군인 신분이 되어 국방부 관할로 넘어가지만, 아직 민간인 신분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과 대체역, 면제 등으로 나누어지는 과정은 내정부가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역정사 사장인 충타이리(鍾台利)

는 자신이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민간인 관료로는 처음으로 역정사 사장이 되었다고 소개했다. 역정사가 국방부 소속이 아닌 점, 또 역정사 사장이 군 출신이 아닌 민간관료였던 점은 대체복무제도가 행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한다. 역정사에서의 공식 브리핑을 한 사람은 여성과장이었다. 우리 직제로 한다면 국장쯤 되는 분이었는데 병무청에 해당하는 기관

의 공식 브리핑을 여성이 담당한다는 사실이 좀 신기했다. 뒤에 창포야(張博雅) 내정부장을 접견했을 때도 총 사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다리를 꼬았다. 우아하면서도 자신감에 넘치는 내정부장은 대만에 장관급 이상의 여성이 부총통 이하 자신을 포함해서 8명이라고 말했다. 공직사회에의 권위주의의 타파와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보며 대체복무제도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충타이리 사장은 우리를 데리고 대체복무를 하는 젊은이들, 이곳 용어로 역남(役男)들이 근무하는 현장으로 향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대만 중부 타이중시(台中市)에 자리잡은 노인의 집이었다. 모두 367명의 노인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 15명의 역남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체복무자들의 근무현황을 소개할 때 노인의 집 원장의 입은 정말 반쯤 찢어져 있었다. 이 제도의 실시로 자신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늘 바라던 것들이 한꺼번에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대체복무자들 중에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명, 영양사가 2명, 재활의학 전공자 1명 등으로, 몇년을 두고 정부당국에 인원보강을 요구하던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물리치료사나 재활의학 전공자를 상주직원으로 채용하고, 이런 인원을 한꺼번에 배치하

자면 사회복지예산을 얼마나 늘려야 할까? 다만 역시 60만명의 대군을 운용해온 병영국가였다. 대만의 인구는 우리의 절반가량인 2100만명. 그 인구로 우리와 맞먹는 병력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사회복지에 돌아갈 예산은 형편없었을 것이다. 대체복무제도의 실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현재 대체복무인원 1만여명 중 40여명인 종교적 이유의 신청자만이 아니었다. 사회복지시설에 젊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창포야(오른쪽) 내정부 장관과 대체복무제도 실시의 주역인 치엔사치에(가운데) 입법의원들과 함께 한담하는 필자.

수천명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사회복지 수준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오고 있었다.

'군기 빠진' 역남들

노인의 집에서 처음 만난 역남들의 모습에서 놀라운 것은 그들의 '군기 빠진' 자세였다. 우리의 병무청장이라면 퇴역 육군 중장이 주로 보임되는 고위직이다. 군대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높은 사람이 부대를 방문하여 나를 지목해서 이야기를 건넌다면 부동자세로 목이 터져라 관등성명을 외쳐야 한다. 그런데 이곳의 역남들은 역정사 사장이 물어보아도 건들건들한 태도에 웃어가며 대답을 했다. 이 엄청난 군기 빠짐, 그것은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고, 동생의 모습이고, 후배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심신장애자들의 교육시설과 시각장애자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여기서도 역남들은 비슷한 분위기였다. 특히 시각장애자학교의 경우는 근무하는 역남의 수가 3명에 불과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보 고내용의 절반이 이들의 활동과 일상생활을 담은 슬라이드쇼로 되어 있었다. 보고를 맡은 이 학교의 총무주임은 사진 속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해가며 보고를 진행했다. 그 순간 '아, 방위나 공익근무요원들에게도 이름이 있는 것

이구나' 하면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라는 시구가 생각났다. 대만의 군대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자살률 때문에 악명이 높았는데, 치엔 의원이 대체복무자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던 말도 떠올랐다.

다음날 방문한 타이중 현 소방국에는 148명의 역남이 산하 20여개 소방서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중 10명이 보고회에 참석하였는데, 대규모 인원이 배치되어 있어서인지, 이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역남들에 비해서는 군기가 바짝 들어 있었다. 이들은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프로젝터의 스크린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를 보면 한국의 사병들에 비해 군기가 빠질 대로 빠져 있었다. 소방서에 대체근무자를 배치한다는 발상은 한국에서도 의무소방대문제로 논란이 야기된

적이 있었다. 우리 참관단에는 군경순직자 유가족회의 어머니 두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국내에서 의무소방대에 징집된 청년을 배치하는 문제에 반대하신 분들이었다. 특히 한국에서 의무소방대 증설문제가 홍제동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순직한 직후에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일반 징집자들을 화재진화 현장에 투입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유가족회의 이애련 회장과 최영금 선생 등이 이 문제를 지적했고, 소방당국과 역정사 관계자들은 대체복무자들이 화재진화 업무에는 투입되지 않고 소방차 관리, 수질 검사, 상황근무, 구출된 인원의 후송 등 보조업무만 담당한다고 답변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신자를 만난 것은 타이중시 인근의 동스(東勢)생활재건센터에서였다. 이곳에는 5명의 대체복무자들이 있었는데,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자였다. 타이중시는 1999년 9월 큰 지진이 발생해 구석구석 사회복지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대체복무자들 상당수가 타이중 일대에 배치되었는데, 행정당국은 이들의 활동에 아주 만족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종교적 이유로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들은 4주간의 신병군사훈련 자체가 면제되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7개월 긴 2년9개월을 복무해야 하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만난 대체

복무자의 한 사람은 자기 형은 4년간 징역을 살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2년9개월은 아무것도 아니라며 밝게 웃었다.

대체복무제도의 어두운 면들

대체복무제도의 주무기관인 역정사에서는 당연히 이 제도의 밝은 면만을 보여주려 했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어두운 면과 개선해야 할 점을 숨기지 않았다. 내정부의 부장 이하 간부들



대체복무제도의 이론적 가수로 활약한 중앙연구원 차신민 교수(위). 대만의 군 인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한 한국 참관단(오른쪽). 플래카드엔 "지휘관이 질병한테 형을 주어서 공을 세우려 하고, 지휘관이 법을 어겨가면서 군의관을 시켜 허위 진단서를 쓰게 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은 이 제도가 위로부터의 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음을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 특히 치엔 의원과 당시 그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추추이칭(邱垂正)은 단호히 이런 해석을 거부했다. 물론 치엔 의원도 이 제도가 자기가 처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역설할 때 기대했던 것에 비해 엄청나게 빨리 시행되었고, 이는 내정부와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빨리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치엔 의원은 1996년 처음으로 이 제도를 추진할 때만 해도 병영국가의 안보논리가 군이나 국방부뿐 아니라 사회전체에 퍼져 있었다고 했다. 치엔 의원은 이 제도의 도입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될 대학생들조차 이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주요 대학의 학생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국회의원인 자신이 학생동아리를 찾아다니며 간부들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1997년에 국방부가 군정실안(軍精實案), 즉 병력감축안을 채택하여 병력을 60만명에서 45만명으로 감축하면서, 군부 역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치엔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추추이칭을 비롯

하여 많은 시민운동가들은 일부 제도의 왜곡과 공평성의 문제를 입을 모아 지적했다. 대체복무제도를 처음 구상할 때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상하였지만, 내정부 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소방역, 경찰역, 교정역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큰 문제였다. 우리 참관단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경찰역이나 교정역은 소방역에 비해 근무조건이 훨씬 열악하고, 사회역의 경우도 노인들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 같은 일을 맡은 사람들은



차라리 현역으로 갈 걸 그랬다고 후회한다는 것이다. 또 돈있고 이른바 '백'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이 대체복무에서 일이 편한 학교 경비 등으로 쏠리는 현상도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 시민운동가들은 대체복무자들의 처우가 현역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이들이 받는 봉급은 현역 신병 수준으로 사병들이 대만달러로 평균 9천 달러(약 34만원)를 받는 데 비해 대체복무자들은 7천달러(약 26만원)밖에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차라리 충격이었다. 우리 사병들의 봉급은 병장이 1만500원. 한국 육군 병장의 2년 반 봉급을 다 모아도 겨우 대체복무자 한달 월급이 안 되는 것이었다.

대만 외성인들의 자각

대만은 여러모로 우리와 비슷한 점을 갖고 있다. 유교적 전통, 일본의 식민지 경험, 파시스트 정권에 의한 국가테러, 분단으로 인한 병영국가화, 우리의 지역감정보다 결코 덜하지 않은 외성인(外省人)과 본성인(本省人)의 대립, 그리고 민주화. 그러나 일주일간의 짧은 관찰이었지만 이런 외형적 유사점을 한 꺼풀 들추면 또 우리와는 아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오랜 기간 대만의 집권세력이었던 국민당의 주류는 본토에서 건너온 외성인들이다. 영화(비

정성시)의 배경이 된 2·28사건 등 백색테러 때 문에 대만의 본성인들 중 다수는 국민당 통치가 오히려 일제의 식민지 통치보다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같은 식민지 경험을 가졌으면서도 대만은 일본교과서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아니, 소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일본 우익교과서 제작의 배후 인물인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善紀)가 그린 <대만론>(臺灣論)이란 만화는 반대로 만만찮았지만 큰 히트를 쳤다. 대체복무제도라는 선진적인 제도가 실시되는 대만에서 교련과목은 선택과목이긴 하지만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아직도 실시중이다. 우리의 시민운동이나 민족운동 진영에서는 통일을 바라는 소리가 지배적이지만, 대만에서는 현상유지 내지는 대만의 분리독립론이 오히려 주류이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옛 지배세력의 태도가 아닐까 한다. 외형

상 우리가 먼저 정권교체를 이루었지만, 우리 사회는 정권은 빼앗겼지만 사회의 헤게모니는 놓치지 않은 수구세력이 자신들의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런데 대만의 외성인들은 본토로 돌아갈 꿈이 깨지면서 이곳에 뿌를 묻어야 한다는 것을 자각했고, 그 과정에서 본지인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민주화가 투쟁으로 일관된 것이었다면, 대만의 민주화에는 투쟁과 더불어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옛 지배세력의 자기변신이 있었다. 대만이 아시아에서 제일 민주화된 나라는 아닐지라도 제일 먼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라는 왕세평(王雪峰) 의원의 지적처럼 그 영광의 절반은 수구반동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자기를 맞추려는 보수세력의 것이 아닐까?

대만의 국민당사 앞에는 장제스(蔣介石)의 아들로 총통을 지내다가 오래 전에 죽은 장징궈(蔣經國)가 "여러분, 지난 한해(민진당 통치 아래서) 몹시 힘드셨지요?"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장제스와 달리 장징궈는 민주화 세력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다. 군사독재 시절보다 오히려 더 패악스러워진 수구세력의 반동을 보면서 대만 민주화의 만만찮은 폭과 깊이를 생각해본다. ㄹ